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2020. June

Vol. 42

6



재정 INSIGHT

KPFIS 인사이드
재정칼럼
툰아보기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재정 STORY

이달의 재정 이야기
재정 Talk Talk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재정 캘린더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June. 2020
VOL. 42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273-05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 02-6908-8593
제작 경성문화사 | 02-786-2999

재정 INSIGHT

04 · KPFIS 인사이드

경제위기시 정부의 재정 대응
김선옥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12 · 재정칼럼

- 정부결산과 국제통계기준
육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결산과 책임성 확보 기제
배득중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더욱 근본적인 방안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4 · 톺아보기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재정 NOW

- 26**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 32**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34** •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 40** • 「dBrain」 포커스
성인지예산제도
(Gender-responsive Budgeting)
- 50** • 키워드 재정
인권
- 54** • 해외재정동향
IMF 재정점검보고서
「IMF Fiscal Monitor, April 2020」



재정 STORY

- 60** • 이달의 재정 이야기
·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전자서명제도 개편
·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 마련
- 66** • 재정 Talk Talk
국세수입이란 무엇일까요?
- 68** •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큐비즘과 축구공
- 72** • 경제철학 이야기
헨리 조지, 토지사회주의의 개척자
- 76** • KPFIS의 서재
- 78** • 재정 캘린더
- 80**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경제위기시 정부의 재정 대응

2019년 12월 말 시작된 코로나19가 범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세계 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렸다.

이런 외부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보통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정책 대응으로 경기를 안정시키고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번호에서는 과거 우리 경제에 위기가 발생했을 당시의 경제 여건을 살펴보고 정부가 추진했던 재정 대응 방향을 되짚어 본다.

김선옥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sokim@kpfis.or.kr)

정부는 대내외 경제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부양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을 사용한다¹.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던 1997년 외환위기, 1999년 대우그룹 사태, 2003년 신용카드 부채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몇 차례 경제적 충격을 경험한 바 있다. 과거 경제위기 중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시작된 충격에 의해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국내 경제 여건 및 위기의 발생 원인에 따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대응에 차이가 있었다. 즉, 부실자산 누적, 부실처리 인프라, 환율·대외 채무 상황에 따라 통화·재정정책의 초기 대응에 차이가 있는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추진된 구조개혁 조치들로 전반적인 경제 효율성이 개선됐기 때문이다². 경제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외환위기의 경우 통화정책은 긴축, 재정정책은 초기 긴축에서 확장 기조로 전환하였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았던 반면, 금융위기의 경우 금리 인하와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으로 대응하였다.

표 1.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 경제여건 및 정책 대응

	외환위기(1997년 11월 발생)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9월 발생)
대외 여건	· 미국 경제 장기 호황 ·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 세계 경기침체 · 글로벌 신용경색 진행
경상 수지	· 반도체 쇼크, 경상수지 적자 확대 (4년 연속 누적 적자 440억 달러)	· 1997년~2007년 누적 흑자 1,560억 달러 (2008년에만 일시 적자 전환)
발생 원인	· 국내기업 부실 심화 · 국내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부족 · 외국인 국내투자 위축 및 국내 주식 매도	· 주요 선진국 자산버블 붕괴 · 국제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부족 · 신흥시장국에서의 투자자금 회수
외환 정책	·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차입 · 외채만기 연장	· 미국 중앙은행 등과 통화스왑 계약 체결 · 은행 외화대출 용도 제한 완화 · 은행 등에 외화 유동성 공급
정책 대응	· IMF 주도의 긴축적 재정·통화정책 · 정부 주도의 강력한 구조조정 · 98년 5월 이후 긴축재정 완화	· 글로벌 공조 하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 민간주도의 자율적 구조조정

¹ 재정정책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화는 호황과 불황의 경기변동 진폭을 축소시켜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부의 세입을 조정하는 조세정책, 세출의 크기를 조정하는 지출정책과 자산 및 부채를 관리하는 정책 등을 사용한다.

² 금융위기에는 외환위기 시기보다 부실자산의 규모가 작아졌고, 변동환율제, 높은 외환보유고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의 경제 여건 차이가 있었다.

1 외환위기

경제 여건

1997년 여름, 태국으로부터 촉발된 동남아 외환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도 해외차입이 중단되고 외화자금의 이탈하면서 1997년 11월 위기가 시작됐다.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단계로 급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1998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6.8%로 역성장하였고, 민간소비증감률과 설비투자증감률은 각각 -13.8%, -24.9%로 소비와 투자 모두 위축되었다.

극심한 외화 유동성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의 초기 대응 기조는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긴축적 통화 및 재정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외환위기 초기의 긴축적 정책은 국내 총수요를 위축시키고 경상수지를 흑자로 전환시켜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고 환율 상승

그림 1.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전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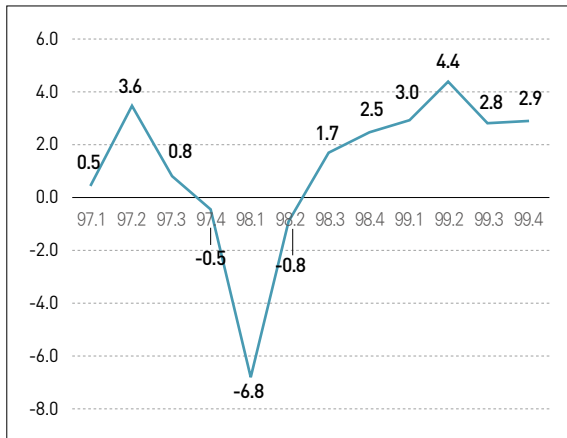


그림 2.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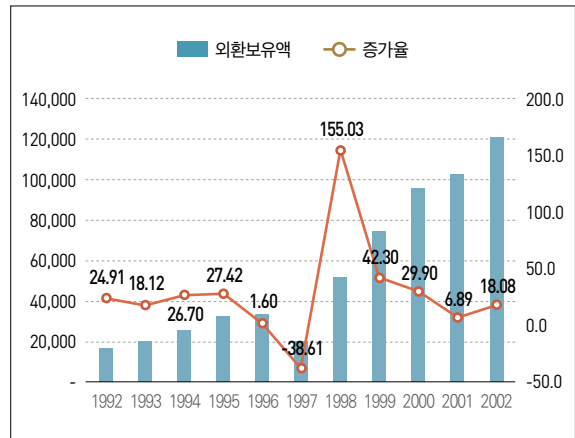


그림 3. 환율 추이

(단위: 원/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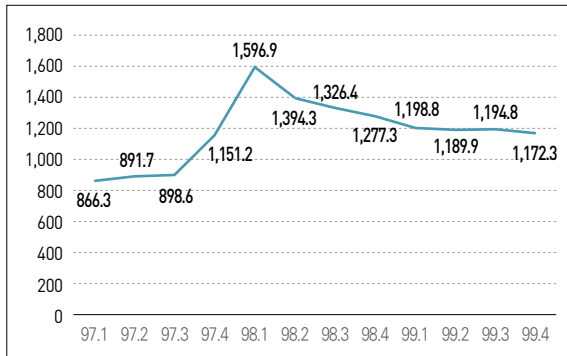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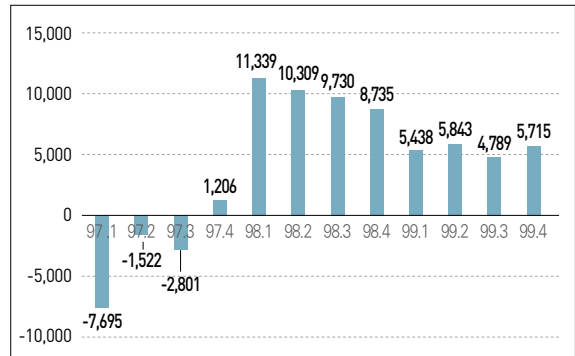


그림 4. 경상수지 추이

(단위: 백만달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억제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1998년 2/4분기부터는 심각한 자금경색 현상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금융정책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였다.

재정 대응

외환위기 직후 1998년 정부 예산은 경제안정을 위한 긴축 운영으로 1984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 수 증가율인 4.1% 증가한 74조원 규모³로 편성되었다. 예산 편성은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 지원과 함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사회 문제들을 재정 및 금융정책으로 보완하는 정책 위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외환위기 기간 동안 1998년 2회, 1999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였는데, 1998년 3월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세출을 삭감(8.1조원)하고, 세수를 확충⁴(4.3조원)하는 등 긴축적으로 운용하였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6.0조원의 실업 및 경기부양 대책과 세입부족 예산분 5.5조원의 보전을 위해 편성되었고, 1999년에는 실업 장기화에 따른 적극적인 실업 대책 마련으로 구성되었다.

표 2. 외환위기 대응 추가경정예산 규모 및 내용

	추경 규모	재원 조달	주요 세출증액 분야
1998년 3월	12.4조원	· 세입증대 4조원 · 세출삭감 8.4조원	· 부실채권 조기정리 및 예금자보호 소요 재원에 대한 이자비용 (3.6조원) ·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2조원) ·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예산 증액(5,214억원 → 5,879억원)
1998년 8월	11.5조원	· 세입증대 2.9조원 · 세출삭감 0.7조원 · 국제발행 등 7.9조원	· 중소기업 및 구조조정 지원(1조 7,250억원) · 사회안전망 확충 및 공공근로사업 확대(1조원) · SOC 사업 투자 확대(1조 2천억원) · 지방재정 지원(1조 2,500억원)
1999년 4월	2.8조원	· 세입·세출 조정으로 재원 마련	· 신한일어업협정 관련 어업인 지원 확대(1천억원) ·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SOC 투자 등(550억원) · 중소기업 수출지원(100억원)
1999년 8월	1.2조원	· 재정수입 초과분	· 서민생활 부담완화(7,155억원) · 중산층 기반 강화를 위한 창업지원(2,790억원)

주: 19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전체 추경 규모 2.7조원 중 자연재해로 인하여 편성된 1.5조원은 제외하였음

자료: 기획재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각 연도

³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포함된 총계 기준 금액이다.(출처: 기획재정부(1998), 「1998년도 예산개요」)

⁴ 경제 여건 변화로 세입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유류 관련 세율 및 금융소득세율 조정으로 세수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의 면세 및 감면대상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였다.

회환위기는 과거 재정투융자 중심의 재정지출 구성에서 복지지출 등 사회안전망 확충 위주로 예산 구성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범정부적 구조개혁으로 발생하는 실업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1998년~2000년 기간 동안, 정부가 중점을 두어 추진한 정책으로 실업 대책 마련과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들 수 있다. 실업 대책으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실직자에게 단기 일자리를 공급하는 공공근로사업 도입(1998년 3월)과 정부 지원 인턴 및 실직자 직업훈련을 확대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총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10인 이상(1998년 1월), 5인 이상(3월), 1인 이상(10월)으로 확대되었는데, 그 대상이 1998년 527만명 → 1999년 605만명 → 2000년 675만명으로 확대되었다. 고용보험 확대와 함께,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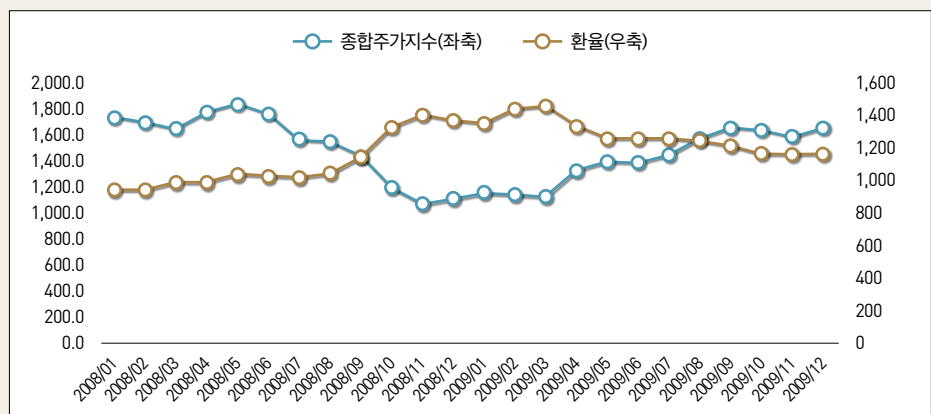
2.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 여건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함께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 부문의 충격으로 2008년 11월 종합주가지수가 위기 이전인 8월 대비 30% 폭락하고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에 따라 원화 가치 하락하였다. 금융 부문에서 시작된 충격은 실물충격으로 이어졌는데, 2009년 4/4

그림 5. 종합주가지수 및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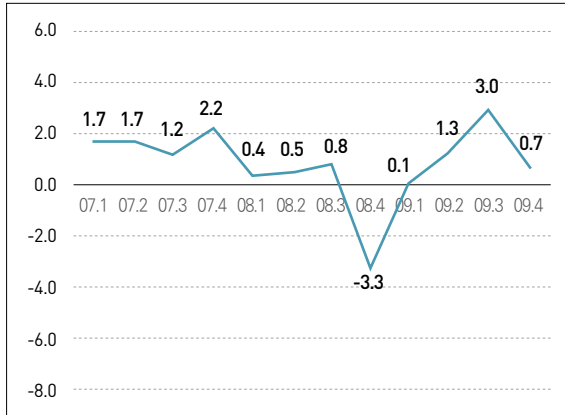
(단위: 포인트(1980.1.4.=100), 원/달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6.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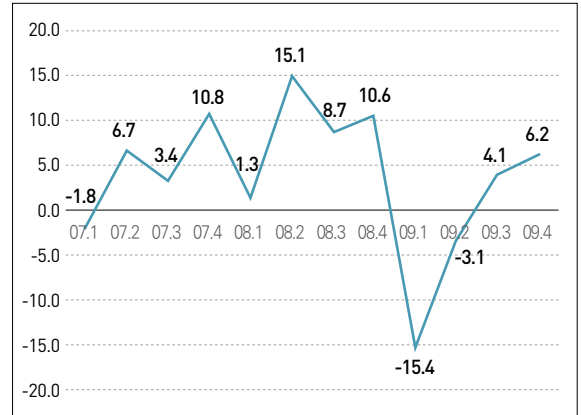
(단위: %, 전기 대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7. 수출증감률 추이

(단위: %, 전기 대비)



분기 경제성장률이 -3.3%로 하락하고, 수출 및 제조업 설비투자가 급감하는 등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되었다.

재정 대응

금융위기 시기에는 위기 발생 시점부터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으로 경기 위축에 대응하였다. 정부는 2008년 11월에 273조원 규모였던 당초 예산안에서 1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증액 내용을 담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고, 2009년 3월에는 28.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⁵을 편성하여 총수요 위축에 대응하였다.

표 3. 2009년도 수정예산 내용 및 규모

증액 지원 사업	규모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교통·물류 시설과 같은 지방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완공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	4.6조원
· (지방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농어업인 지원) 금융경색에 따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신용보증 확대와 정책자금 확충 등에 사용	3.4조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실업대책 지원) 저소득·취약 계층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사업과 청년인턴제 확대 등 실업난 완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	1.3조원
· (지방재정 지원)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경제 활력 유지	1.1조원

자료: 기획재정부(2008), 「2009년 수정예산안 개요」

⁵ 2009년 3월 30일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고 4월 29일에 의결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한 분야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120만 가구에 추가 생계지원, 저소득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 무주택 서민 임대보증금 용자를 지원했다. 둘째, 고용유지·취업 기회 확대로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를 지원(5,118억원을 추가)하고,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시행하여 40만 개의 공익형 일자리를 지원했다. 셋째,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을 1.5조원 확대하고, 모태펀드 등에 2,50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창업투자가를 지원했다. 넷째, 교부세 감소로 인해 지방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채 인수 및 지역신보 등에 5,7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로 성장잠재력을 확충을 위해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투자, 교육선진화 부문 등에 2.5조원을 지원했다.

표 4.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 규모 및 주요 내용

규모	재원 조달	주요 세출증액 분야
· 28.9조원 · 세출증액: 17.7조원	· 세계잉여금 2.1조원 · 여유자금 4.8조원 · 기금차입금 1.5조원 · 국채발행 19.9조원 · 세입결손 11.2조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4조 2천억원) ·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3조 5천억원) ·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4조 5천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3조원) · 미래대비 투자(2조 5천억원)

자료: 기획재정부(2009),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그리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대응과 함께, 신용경색 문제 해소를 위해 정책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하⁶⁾하고 23.3조원 규모의 원화 유동성 공급, 가계대출 부담 완화 대책, 은행 건전성 제고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 등이 추진되었다.

3. 시사점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재정정책 수행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외환위기는 위기 발생 3년 만에 IMF로부터 차입한 195억 달러를 2001년에 전액 상환하였고, 금융위기 때에도 우리 경제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조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발 경제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국가 내-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축된

경제활동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가져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0%, 우리나라는 -1.2%로 전망하였으며, 실제로 우리나라 1/4분기 경제성장률은 -1.4%로 역성장하였고, 민간소비증감률은 전기 대비 -6.4%로 나타나는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만 한다. 이에, 위기의 우선 극복을 목적으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⁷ 소비를 진작시키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⁸. 다만, 위기 상황을 벗어난 이후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늘어난 재정 부담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9,10}



6. 정책금리가 2008년 9월 5.25%에서 2009년 2월 2.0%로 큰 폭으로 인하되었다.

7. 우리나라는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제1회 추경에서 10.9조원 지출 확정(3월 17일), 제2회 추경에서 8.0조원의 지출 확정(4월 30일)됐으며, 16.0조원 지출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4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8. 전국민을 대상으로 14.3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마련 등 총 25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9.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통합재정수지는 본예산 기준 30.5조원 적자(GDP 대비 -1.5%)에서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각각 41.5조원 적자, 48.9조원 적자(GDP 대비 -2.1%, -2.5%)로 적자폭이 확대되고,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805.2조원(GDP 대비 39.8%)에서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각각 815.5조원, 819.0조원(GDP 대비 41.2%, 41.4%)으로 증가하였다.

10. 위기 극복 이후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과 1999년 각각 -3.5%, -2.2%였으나, 2000년부터 1%대의 흑자를 유지하였고,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에는 -1.5%였으나 위기 극복 후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1%대의 흑자를 유지하였다.

참고 문헌

- 고영선 외(2007), 「경제위기 10년: 평가와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기획재정부, 「통합재정수지」 각 연도
- 기획재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각 연도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①

정부결산과 국제통계기준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dsoc@incheon.ac.kr)



200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정부결산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그 혁명적 변화의 배경에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네 가지 흐름이 있다. 첫째, 1970년대부터 추진되던 행정업무 전산화가 2000년대에 웹 기반의 '전자정부(e-Government)' 정책으로 전면 확산되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정부는 재정 관련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정부의 세입·세출, 국고금, 채권, 국유



재산, 물품, 채무회계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여기서는 당시의 예산회계 업무들을 전산시스템으로 묶어내려 하였기에 회계방식과 회계기준의 재검토를 전제로 하지는 않았다.

둘째, 1994년 인천시 북구청과 부천시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소위 ‘세금 도둑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회계의 획기적 개편이 요구되었다. 이들은 정부회계가 개별 장부 중심의 단식부기로 처리되고 있기에 이러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회계사들로 구성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정부거래도 민간기업처럼 차변과 대변으로 이중기재하여 자기검증이 가능한 복식부기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셋째, 199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의 정부개혁 프로그램들이 정부회계에 민간기업의 회계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부의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발생주의로 전환하여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망라하는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또 운영수입과 운영비용을 기간별로 대응하는 운영수지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매년 재무적 운영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 이는 신공공관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던 경제학자와 행정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넷째, 2000년대에 들어와 재정학자들을 중심으로 재정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위해 IMF의 재정통계지침(GFSM;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IMF는 2001년에 GFSM 개정판을 발간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재정통계기준을 획기적으로 개편한 것이었다. GFSM은 발생주의 회계기준뿐만 아니라 자산, 부채 및 각종 거래의 개념적 분류기준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1979년부터 GFSM에 따라 매년 「한국의 재정통계」(1995년 이후에는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발간하였는데, 전면 개정된 2001년 지침을 정부결산에서 준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정부결산 개편에 대한 이 네 가지 요구는 2000년대 초반에 한꺼번에 분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이 모든 요구를 수용하고자 2004년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추진기획단’을 발족시켰다. 기획단의 주된 업무는 기존의 예산시스템(FIMSys; Fis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과 회계결산시스템(NaFIS; National Finance Information System)을 통합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시스템)이란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dBrain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흐름을

수용할 수 있었다.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발생주의를 도입하며 2011년부터는 중앙정부(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중앙정부의 재무제표, 특히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는 재정상태표의 주석에는 '장기충당부채',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자세하게 수록되면서 재정정보의 투명성은 크게 개선되었다. 재정상태표의 주석 사항들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공개하였는데, 이들은 재정위험의 관리에 필수적인 정보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공개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상태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은 더욱 고조될 수 있었다.

그런데 네 번째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IMF의 2001년 GFSM의 핵심적 개정 내용은 ① 통합재정 범위를 회계·기금단위에서 제도단위(Institutional Unit)로 전환하고, ②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도입하며, ③ 자산·부채 및 각종 거래를 체계적으로 재분류하는 것이었다. dBrain시스템에서 발생주의를 이미 도입하였기에 결국 정책적 과제는 ①과 ③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쟁점 ①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오랜 논란을 거치며 2012년 12월에 제도단위 중심의 재정통계를 공표하였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외에 비영리공공기관 214개를 재정범위에 포함시킨 통계를 「한국통합재정수지」에서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2014년에 제도단위 중심의 비금융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발표하며 공공부문 전체에 제도단위 통계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결산에서 남아 있는 마지막 과제는 쟁점 ③으로서, 각종 거래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재분류하는 것이다. dBrain시스템 구축 작업이 기업회계에 특화된 회계사 등 회계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각종 정부거래와 재정지표들에 대한 재정정책적 이해가 부족하였다. 이 때문에 GFSM 등 국제통계기준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국가결산보고서」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은 매우 낮다.

IMF의 GFSM은 UN의 국민소득계정(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을 근간으로 하는데, 이는 모든 국가가 경제사회통계를 작성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이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특히 재정통계는 국민경제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정부를 대상으로 하기에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IMF의 GFSM에서 제시하는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분류는 우리나라 dBrain시스템의 정부거래 분류와 서로 다르다. GFSM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수익으로 조세, 부담금 등 강제적 재원을 중시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국가결산보고서」에서는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을 중시하는 등 지나치게 기업회계적 관점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GFSM에서는 조세의 범위를 그 실질적 성격에 따라 파악하는 데 반해 dBrain시스템에서는 그 명칭으로부터 조





세를 파악함으로써 조세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 우리나라의 예산회계 업무에서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개념과 용어들을 GFISM에 부합하도록 연결시킬 때, 비로소 재정통계로부터 재정운용에 관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dBrain시스템에서는 상세한 재정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예산과목'과 별도로 '재무계정과목'을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산과목은 예산집행을 통제할 목적으로 구분되는 과목체계인 반면, '재무계정과목'은 다양한 거래들의 성격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여 충실한 재정정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과목체계이다. 예산과목은 세분하면 할수록 예산집행의 재량권은 줄어들지만 '재무계정과목'은 그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정정보의 양은 더욱 더 풍부해진다. 후자의 과목체계를 GFISM과 일치하도록 개편한다면 재정운용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또 우리나라의 재정통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는 한층 개선될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후 이어진 많은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재정정보의 국가 간 비교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IMF, OECD, EU통계청(EUROSTAT) 등 국제기구들은 정부회계의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국가 간 비교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 재정정보의 국제적 기준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정부결산 개혁에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지만 아직도 가야 할 멀고도 힘든 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결산과 책임성 확보 기제

배득중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dbae@yonsei.ac.kr)



정부재정의 책임성 문제는 어렵고도 어려운 주제이다. 게다가 거의 요식행위에 가까운 결산에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책임성이란 영어로 Accountability인데, 말 그대로 회계처리(Accounting)만 잘하면 되는 최소한의 범위에 서부터 국가의 장래를 책임져야 하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개념의 폭이 크다.

필자는 몇 년 전에 결산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고를 하였거니와 그 당시에 현행 결산제도의 문제점으로 생각했던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자. 우선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는 1,400페이지가 넘는데 이 중 성과와 관련된 언급은 40페이지 남짓이다. 또 예산을 편성하던 당시의 정책 우선순위가 결산서에서는 그 모습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관료제도의 기본 상황이 매우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덜컥 벤치마킹할 수는 없다. 우리 나름대로 결산에서 책임성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성과에는 사업성과와 재정성과가 있을 수 있는데 사업성과는 어떤 사업의 기획, 자원조달, 대국민 서비스의 과정을 통해서 달성된다. 그런 반면, 재정업무는 자원조달 과정의 일부로서 예산요구에서 시작하여 결산에서 종결된다. 그래서 재정성과는 예산집행률, 이월 등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산서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산서에서 성과실적이 제한적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또 사업성과는 사업부처·청 또는 지출담당 조직에서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결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나 사업부처의 재무담당 조직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혁신이 요구되는 시대에 정부결산만 무풍지대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재정의 책임성을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돌아본다.

우선 재정관리를 곳간 지키기(Gate-keeper)로 보는 전통적인 관점이다. 이 경우 책임성은 곳간 출납의 정확한 관리와 도둑 잡기에 집중되며 구체적으로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들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다. 현재의 국가결산서는 이 목적에 충실하게 작성되고 있다.

두 번째 관점은 기획재정부가 수요자(Consumer) 역할을 한다는 관점이다. 그것도 「대한민국 헌법」 제54조가 보장하는 독점적 수요자(Monopsonist)이다. 그래서 각 사업부처들이 물건(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을 팔러 오면, 기획재정부가 품질, 용도, 가격 등을 판단하여 구매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구매한 상품이 제때 배달이 되는지 품질은 약속한 것과 같은지 따져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 세부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의 성과(책임성)를 낱알이 검토한다. 하지만 독점수요자의 구매과정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편성작업 속에서만 배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검토된 성과 및 책임성 문제는 결산서에 명시되기가 어렵다.



세 번째 관점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로부터 구매하는 행정서비스들은 이미 만들어진 상품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야 할 상품들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재원의 공급자(Supplier) 역할을 하고 행정서비스는 각 부처에 의해서 독점(Monopoly)적으로 공급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과 대통령을 대리하여 각 부처에게 재원을 공급함으로써 부처들이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라고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사업부처 간에는 늘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고, 당연히 모니터링(Monitoring) 문제가 수반된다. 그래서 「국가회계법」 제1조2에서는 회계책임관에게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도 수행하라고 한다.

Monopsony와 Monopoly가 만나는 곳에서 정부재정이 운용되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서 보편적인 결산 방식으로 행정의 책임성을 논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현행의 공간지기 법령체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결산제도 또는 법 규정을 바꾸면 책임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 영국의 사례를 우선 살펴보자.

영국은 1850년대부터 발생주의 회계를 결산에 적용해오고 있다. 그런데 서기 2000년에 이르기까지 회계과는 한직 중의 한직이었다. 하지만 자원회계를 이용한 재정개혁을 하면서 갑자기 중요부서로 떠올랐다. 해당 회계과가 소속된 부처의 성과를 평가하여 ① 절감된 금액을 부처의 운영비로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고, ②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게 하면서부터이다. 즉 결산-성과-예산을 연계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자 공무원이 행정을 수행하는 자세가 달라졌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개혁을 하면 결산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까? 그러나 늘 그렇듯 외국제도를 볼 때는 그 나라의 독특한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한다.

영국은 공무원 봉급체계와 예산운용에 있어서 개별 사업부처의 자율성이 매우 크다. 즉, 영국은 기관마다 서로 다른 봉급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영국보다 더 자율적이다. 즉, 소관 장관이 예산 한도(Ceiling) 내에서 해당 부처의 공무원 인원수 및 개별 연봉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처럼 관료제도의 기본 상황이 매우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덜컥 벤치마킹할 수는 없다. 우리 나름대로 결산에서 책임성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가장 가능한 것은 현행의 법규를 잘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국회는 즉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결산 심의를 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가능하면 기획재정부의 차년도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회의 검토사항이 행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뿐 아니라 요즘은 통합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이하 dBrain시스템)에 의해서 지출이 관리되기 때문에 사실상 결산서의 국회제출도 5월 31일보다 훨씬 더 일찍 이루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에 있어서 감사원이나 국회의 지적사항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중요 검토사항의 하나이다. 따라서 결산위원회의 조기 개최는 앞에서 언급한 소비자(Monopsonist)로서의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두 번째로 가능한 개선조치도 역시 IT 기술의 발전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현재 dBrain시스템의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의 단위사업 레벨의 관리에서 세부사업 및 과제 단위 레벨의 사업관리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산-지출-결산-성과평가의 단위가 말단 사업에서부터 일치된다는 것이다.

거기에도 성과평가 방식이 재정사업자율평가 제도에서처럼 이미 끝난 사업에 대한 사후적 평가로부터, 핵심사업관리제도처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평가 방식으로 바뀐다면 예산-지출-결산-성과평가의 고리가 완성된다. 그리되면 국민을 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행정의 독점공급자(Monopolist)인 사업부처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결산제도로는 나름대로 제약조건들을 다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책임성 문제를 더 이상 향상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조기결산, 평가제도의 개선, IT의 뒷받침 등 다른 변화가 추가되어야 결산의 책임성 문제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더욱 근본적인 방안

현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목표는 경제성장이어야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jseeun@cnu.ac.kr)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다. 물론 외환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급증하기도 했으나, 단기적 현상이었다. 특히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로 인해 2018년 OECD 국가들이 GDP 대비 평균 109.2% 정도의 국가채무를 보유하게 된 반면 우리나라는 40%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차 추경까지 합하면 총 60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는 것이므로 국가채무의 단기 급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내년에도 국가채무는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한국형 뉴딜을 포함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증가를 배경으로 '국민 1인당 빚이 얼마로 증가한다'와 같은 자극적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의 빚이 개인의 빚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 모두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을 진 것처럼 부정적 분위기를 야기하는 보도는 일단 논외로 하고, 국가채무 증가가 실제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지, 국채증가를 용인하면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해서 얻을 이득이 클지에 대해 냉정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



국채 급증에 대해 우려하는 주된 이유는 지금과 같이 자본이 전 세계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경우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 평균에 비해 매우 작다. 또한 IMF의 전망대로라면 올해 선진국들의 국가채무는 GDP 17.2%p 규모로 증가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증가폭은 그보다 작을 것이므로 올해가 지나면 오히려 격차는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국채 증가로 인한 신뢰 상실, 그로 인한 자본 이탈 가능성은 낮다. 더욱이 현재 저금리 상태로 인해 국채의 발행·유지 비용이 크지 않으며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배적일 것을 고려하면 안전 자산으로서의 국채의 인기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만일 경제가 성장 활력을 잃지 않는다면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올라갈 수도 있다.

따라서 관건은 경기이다. 만일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면 적자재정을 통한 국채발행이 당장은 문제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는 클 것인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양호하다는 점, 그리고 그 이유가 완전한 경제봉쇄를 시행하지 않았고 1차, 2차 추경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부양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을 설계하면서 생계 곤란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되 자영업 부문에 단기적으로 소비하도록 한 것이 주효했다. 정부가 3차 추경에서 밝힌대로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투자와 고용의 창출, 고용 안전망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생계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기부양 효과는 작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이 정도로 강력하게 나서야 하는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이 정도의 대응은 아니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의 위기와 현재의 위기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우리경제가 그나마 수월하게 넘겼던 이유는 세계 경제가 동시에 위기에 빠진 상황이 아니었고 더구나 이웃 중국이 빠른 경제 성장과 경기 부양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도 중국은 몇 년 지속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여 선진국 경기 부진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해 주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전 세계 경제가 동시에 당면한 위기이다. 수출을 통한 성장이 어렵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이미 리쇼어링 기업에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수출이 막혀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가 성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일이다. 정부가 판을 깔고 민간이 부응한다면 당장의 경기부양이 될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승기를 잡을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국가채무가 가급적 작은 것이 경제에 좋다는 인식도 2008년 이후 크게 변하였다. 재정적자 발생을 억제하고 국가채무 규모를 줄이는 긴축적 재정정책이 지배적 재정정책 기조가 된 것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이다. 유로화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유로 가입국은 재정적자 GDP 3%, 국가채무 60%라는 상한선을 지키겠다는 '안정과 성장 협약'에서 명하기도 했다. 건전재정을 실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전 세계적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유행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러한 재정정책이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정말 기여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재정긴축이 복지축소를 야기하여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국가채무를 줄이려는 선진국들의 긴축적 재정정책은 민간부채의 급증을 낳았다. 또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핵심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의 저성장,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침체 심화가 유로존에서 강제되고 있는 긴축적 재정정책 때문이라는 분석도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 경제권이 디플레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선진국 정부들이 적자재정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정책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무관치 않다.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한 원칙이 국가채무를 현재 수준, 혹은 GDP 몇 %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경제는 영속하는 것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그리고 성장까지 포함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채무 규모와 재정건전성이 추구되어야 한다. 현재의 관건은 성장의 유지라는 점에서 재정정책은 그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마땅하다.



툇아보다 : 살살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우상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woosh@kpfis.or.kr)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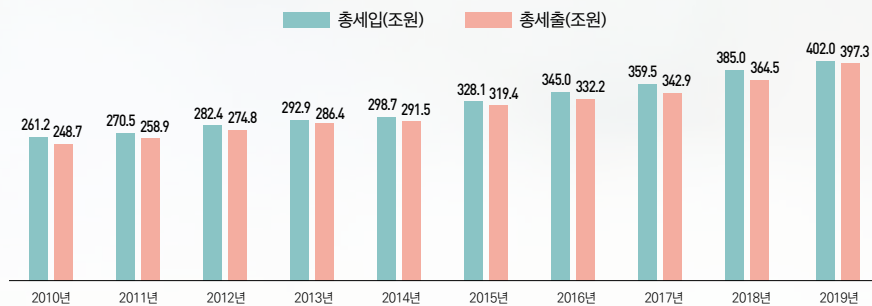
-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세입은 402.0조원, 총세출은 397.3조원으로 결산상잉여금 4.7조원, 이월 2.6조원을 반영한 세계잉여금 2.1조원 발생



(단위: 조원)

구분	총세입 (A)	총세출 (B)	결산상잉여금 (C=A-B)	이월 (D)	세계잉여금 (E=C-D)
일반회계	332.2	330.9	1.4	1.3	0.06
특별회계	69.8	66.4	3.4	1.3	2.1
합계	402.0	397.3	4.7	2.6	2.1

- 최근 10년간 총세입·총세출 추이



자료: 대한민국정부(2020),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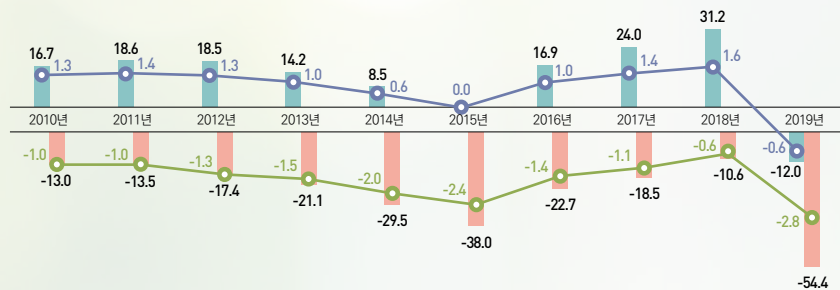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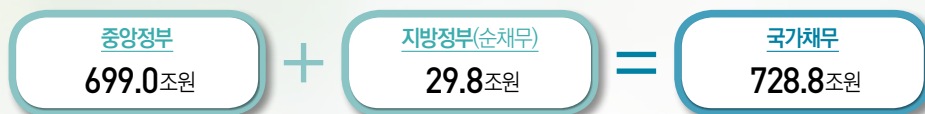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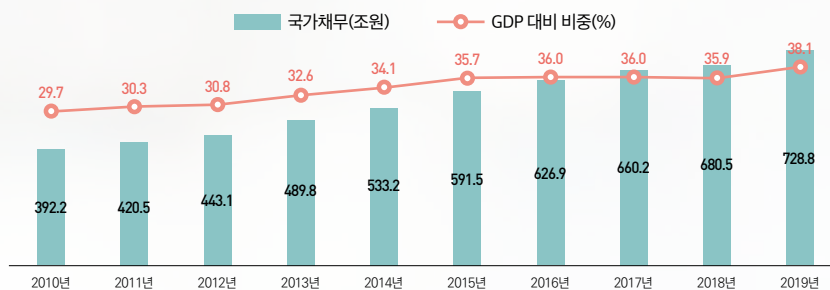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 [■ 규모(조원) ● GDP 대비 비중(%)] 관리재정수지 [■ 규모(조원) ● GDP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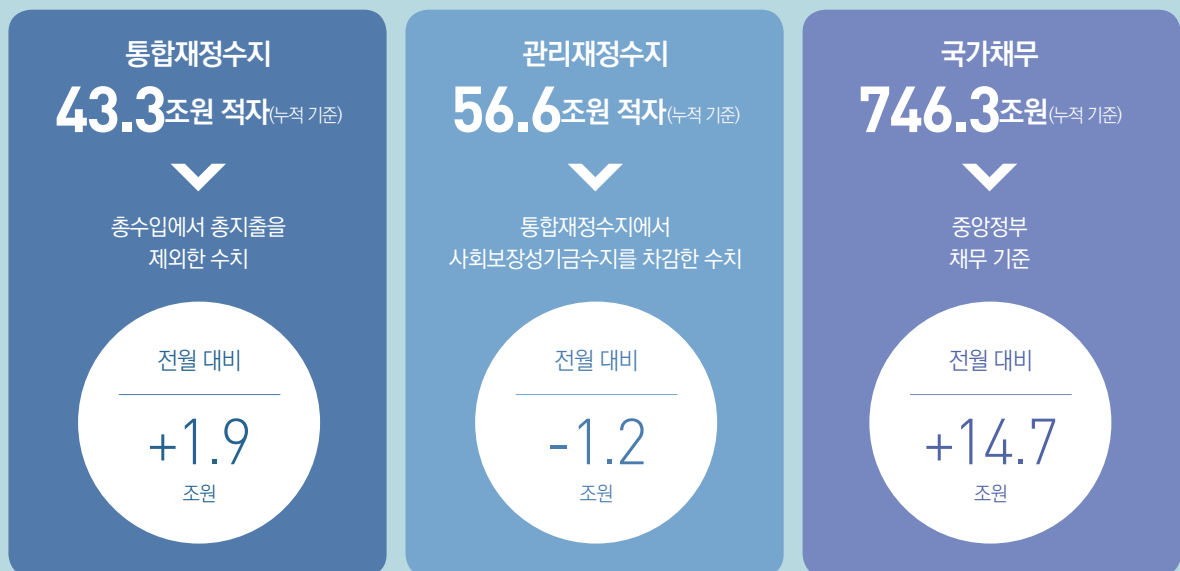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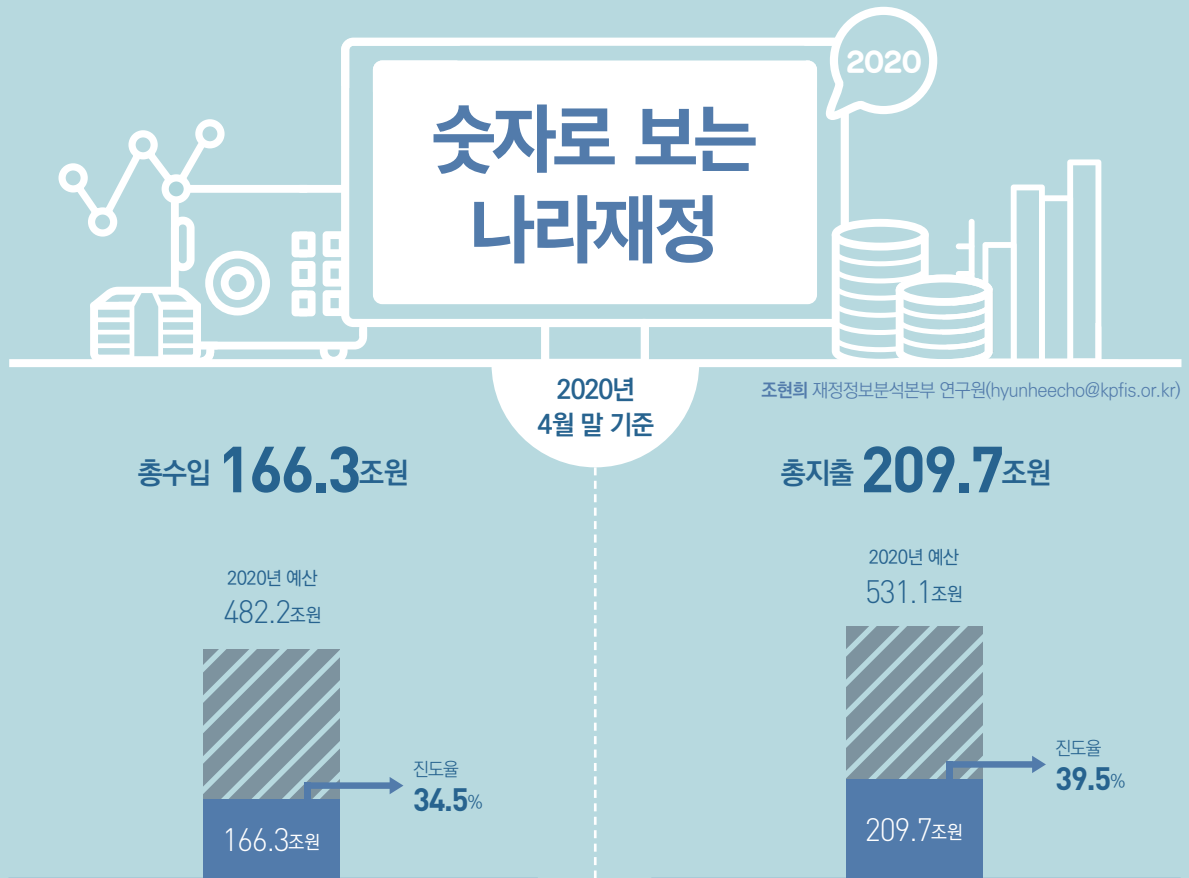
국가채무



○ 최근 10년간 국가채무 추이



자료: 대한민국정부(2020),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주 1)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0. 6.

총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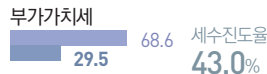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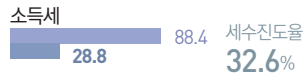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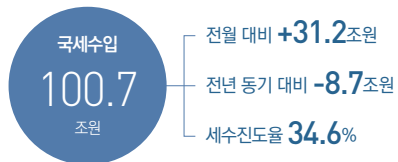
• 2020년 4월 말 기준



주 1)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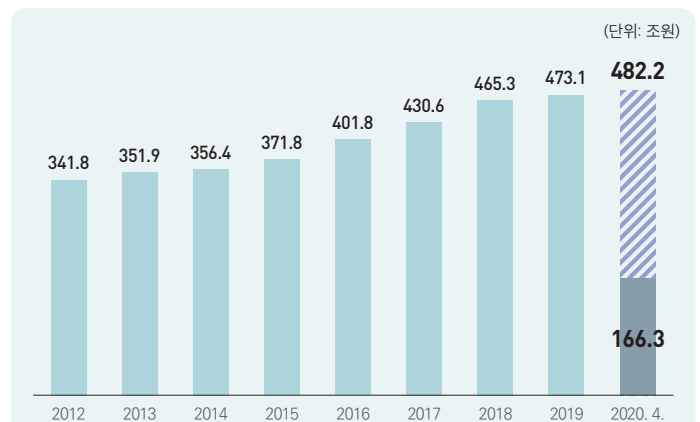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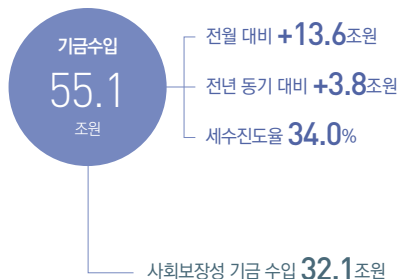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 2020년 예산
■ 2020년 4월

주 1) 세수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대비 당월 누계 세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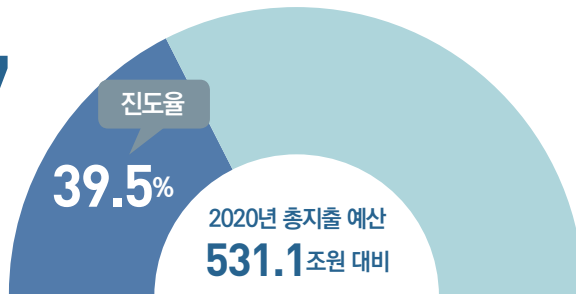
주: 2019년까지는 결산,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총 지출

• 2020년 4월 말 기준

총지출
209.7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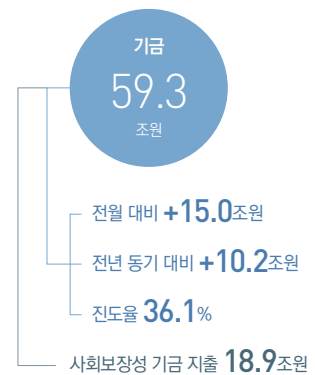
전월 대비
+44.8
조원

전년 동기 대비
+13.0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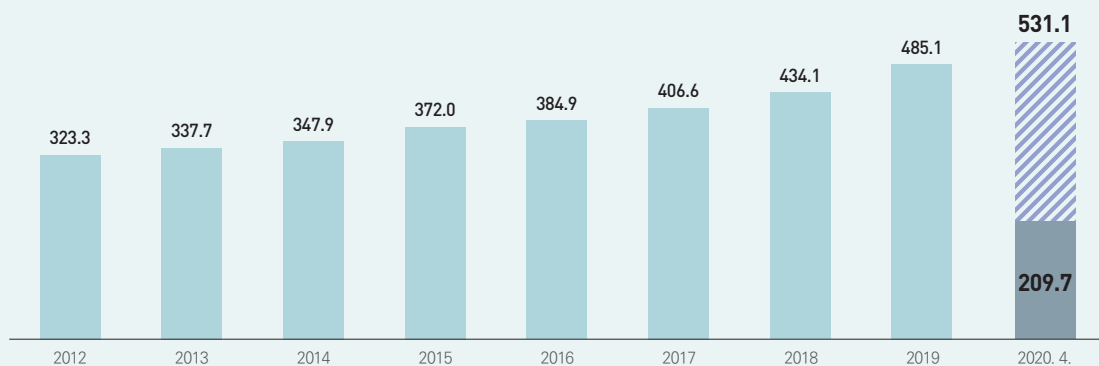
주 1)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단위: 조원)



주: 2019년까지는 결산,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연간계획 대비 **44.7%**



(단위: 조원, %)

	연간계획(A)	4월 실적(B)	집행률(B/A)
합 계	307.8	137.7	44.7
중앙부처	263.8	121.0	45.9
• 예산	213.3	95.8	44.9
• 기금	50.5	25.1	49.8
공공기관	44.1	16.8	38.0

2020

상위 5개 부처 (누적 기준)

(단위: 조원, %)

	부처명	4월 실적	집행률
1	중소벤처기업부	9.0	71.8
2	산업통상자원부	5.1	62.4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9	61.0
4	문화재청	0.5	59.0
5	보건복지부	11.6	56.0

주 1)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45개 중앙행정기관과 39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2) 집행률은 해당 연도의 연간 계획 대비 당월 누계 실적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수지

• 2020년 4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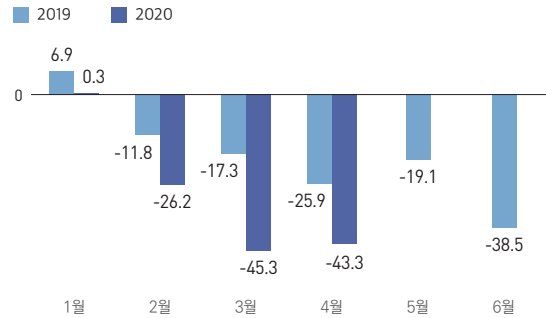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

43.3조원 적자

전월 대비

+1.9
조원

전년 동기 대비

-17.5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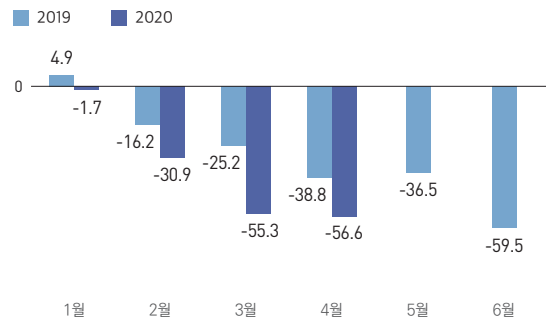
관리재정수지

56.6조원 적자

전월 대비

-1.2
조원

전년 동기 대비

-17.7
조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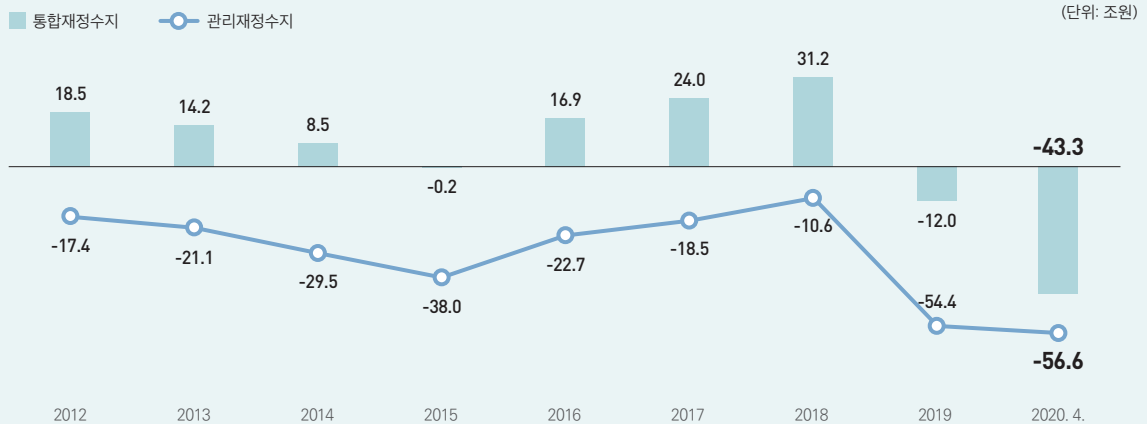
13.2조원 흑자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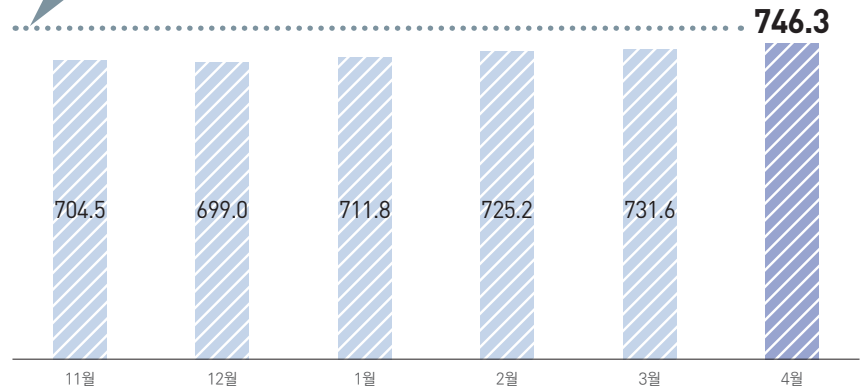
국가채무

• 2020년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746.3조원

2020년 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787.0조원



전월 대비

+14.7

조원

전년 대비

+47.3

조원

주 1)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 현재 지방정부 채무 통계는 결산기준으로 연 1회 산출되므로 월별 추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공개함(2018년 국가채무는 680.5조원이며, 그중 지방정부 채무는 32.7조원임)

2)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반영

3) 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차 추경 규모

총 **35.3조원** 세입경정 **11.4조원** + 세출확대 **23.9조원**

3차 추경 포함시 코로나19 대응 정책패키지 **270조원** 수준

세입경정

11.4 조원

- 세수 감소분 보전 및 세제감면 뒷받침

135조+α 금융패키지 재정지원

5.0 조원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1조 9천억원

- 소상공인 2단계 자금공급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 정책자금 지원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3조 1천억원

- 채권·증권안정펀드 조성, 비우량 회사채·CP 등
매입기구 설립, 코로나 P-CBO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4 조원

「고용안정 특별대책」 소요 뒷받침 8조 9천억원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설,
55만개+α 직접일자리, 구직급여 등 실업자 지원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5천억원

- 긴급복지 지원 확대, 청년·근로자 햇살론 추가 공급,
다자녀가구·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추가 공급

경기보강 패키지

11.3 조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조 7천억원

- 8대 할인소비쿠폰 제공,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확대
유턴·해외 첨단기업 투자유치, 중기·소상공인 회복지원

한국판 뉴딜 5조 1천억원

- 디지털 뉴딜**
- ① D.N.A.생태계 강화
 - ②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 ③ 비대면 산업 육성
 - ④ SOC 디지털화

- 그린 뉴딜**
- ①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 ②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③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고용안전망 강화

-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K-방역 및 재난대응 2조 5천억원

-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
재난 대응시스템 : 사업장 안전 빅데이터,
화재예방설비, 화학물질관리

* '한국판 뉴딜'과 타 과제(고용안정 특별대책 및 K-방역 등)간 중복: 약 1.8조원

재원조달

1

지출구조조정
10.1 조원

2

기금 자체재원 활용
1.4 조원

3

국채발행
23.8 조원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25개 과제

5.1조원

'22년까지 총 31.3조원 수준 투자

디지털 뉴딜

2조 7천억원

'22년까지 총 13.4조원 수준 투자

1 D.N.A. 생태계 강화 1조 3천억원

- ①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 ② 5G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 ③ 1·2·3차 산업 5G·AI 융합 확산
- ④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2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1천 4백억원

- 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공공시설 WiFi 구축
- ⑥ K-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3 비대면 산업 육성 7천 5백억원

- ⑦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 ⑧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 ⑨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
- ⑩ 중소기업 16만개에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4 SOC 디지털화 4천 8백억원

- ⑪ 4대 핵심시설 디지털 안전관리
- ⑫ 도시·산단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

고용안전망 강화

1조원

'22년까지 총 5조원 수준 투자

- ⑲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⑳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 ㉑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그린 뉴딜

1조 4천억원

'22년까지 총 12.9조원 수준 투자

1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 3천 7백억원

- ⑬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환
- ⑭ 스마트 그린도시 선도프로젝트 100
- ⑮ ICT 기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2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4천 8백억원

- ⑯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 ⑰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녹색산업 조성

3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5천 8백억원

- ⑱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⑲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 ㉐ 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 전환

- ㉒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 ㉓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재정정보공개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전규식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gsjeon@kpfis.or.kr)

국유재산

국유재산이란 넓은 의미로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권을 가진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번호에서는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정의·웹툰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교실 > 국유재산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 > 국유재산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교실 > 국유재산에서는 국유재산에 대한 정의, 관련 법령, 종류, 관리체계 등을 도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 > 국유재산에서는 웹툰 형식을 통해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2 현황·추이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데이터자료 > 국유재산 >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괄/ 국유재산현황 

상세재정통계DB에서는 국유재산 현황과 추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데이터자료 > 국유재산 >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괄에서는 회계연도별 국유재산의 종류, 전기이월수량, 전기이월금액(천원), 본년도증가수량, 본년도증가금액(천원)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데이터자료 > 국유재산 > 국유재산현황에서는 국유재산에 대한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 국유재산 총액(억원), 토지 수량(km²), 토지 금액(억원), 건물 금액(억원), 유가증권 금액(억원), 기타 금액(억원)을 조회할 수 있으며, CHART 탭을 선택하면 국유재산 총액의 추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본문

상반기연결

자료출력

재정데이터명

국유재산

검색

SHEET

CHART

FILE

LINK

Open API

전체 2건, (1/1 page)

재정데이터명	서비스 유형	공표 시기	생산 기관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괄 본 통계는 결산 자료로, 매년 6월 초 전년 결산 정보가 공개됩니다.	SHEET Open	연간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현황 <국유재산 정의> 넓은 의미의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 토산, 부동산 및 권...	SHEET CHART Open	월간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괄

메타정보열기

SHEET

OPEN API

마감연도

2018

조회

※월별영역을 클릭하면 데이터 정렬이 가능합니다 (▲오름차순 / ▼내림차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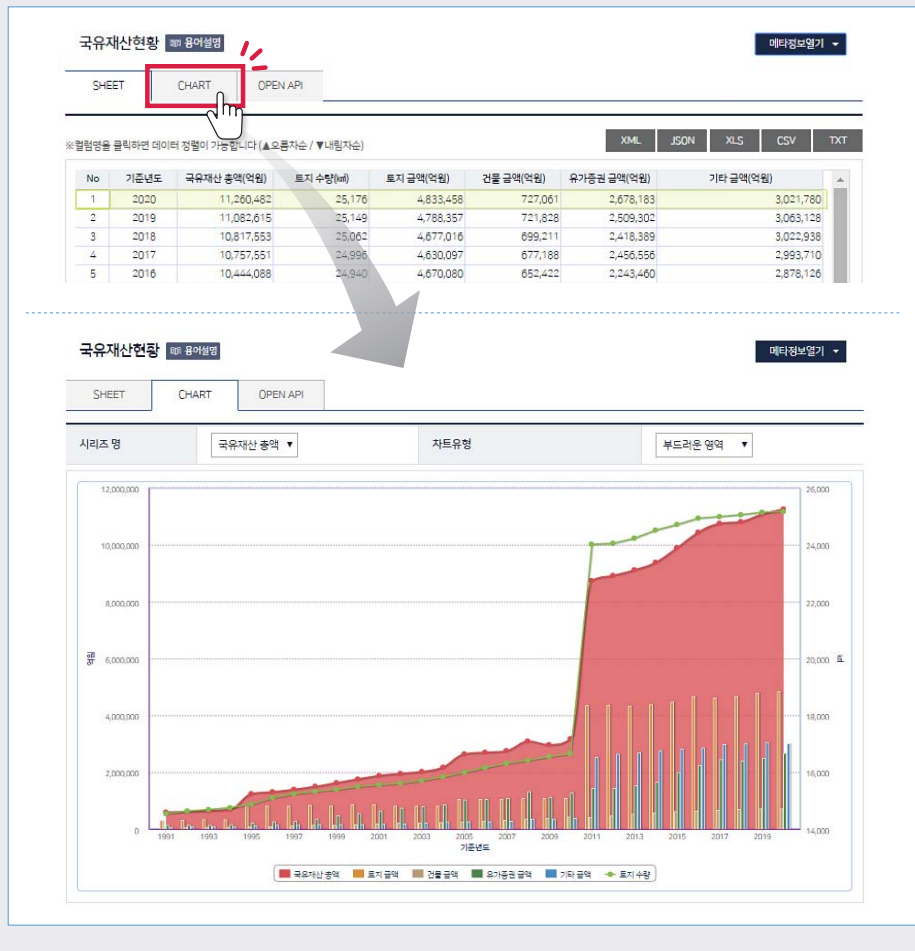
XML JSON XLS CSV TXT

No	마감 연도	재정분류명	결산재정종류명	수량단위	전기이월수량	전기이월금액(천원)	본년도증가수량	본년도증가금액(천원)
1	2018	총괄	합 계	ml		1,075,755,112,374		130,034,405,352
2	2018	총괄	토 지	㎡	24,995,734,016.97	463,009,749,781	1,592,411,568.38	44,199,161,746
3	2018	총괄	(임 야)	㎡	16,073,801,490.94		508,505,266.44	
4	2018	총괄	건 물	㎡	166,468,022.39	67,718,788,120	15,213,323.00	8,227,063.375
5	2018	총괄	공 작 물			282,166,010,082		19,485,821,890
6	2018	총괄	임 목			12,838,713,959		312,735,188
7	2018	총괄	선박·항공기			2,317,841,453		731,809,546
8	2018	총괄	(선 박)	척	714.00	1,742,419,482	166.00	681,408,392
9	2018	총괄	(항 공 기)	대	110.00	575,421,972	12.00	50,401,154
10	2018	총괄	기 계 기 구			925,215,793		278,929,045
11	2018	총괄	유 가 증 권			245,655,585,843		55,344,705,456
12	2018	총괄	(증 권)	좌	5,051,394,156,024.00	197,877,404,995	1,244,390,279,288.00	53,760,697,645
13	2018	총괄	(주 식)	주	6,356,231,229.00	43,995,284,358	284,252,996.00	1,581,007,811
14	2018	총괄	(채 권)	매	94.00	3,782,896,490	1.00	3,000,000
15	2018	총괄	무 제 재 산	건	1,151,055,285.00	1,123,207,344	1,210,448,850.00	1,454,179,107

15 / 15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3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문서자료 > 결산보고서 > 재정데이터명 '국유재산' 검색 >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문서자료 > 결산보고서 > 재정데이터명 '국유재산'을 검색하면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란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라 각 정부 부처가 작성한 국유재산관리운용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총괄청)가 통합해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종류별 국유재산 증감액, 현재액, 회계·기금·소관 중앙관서별 국유재산 종합계획 및 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 집행실적 현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는 1963년도부터 2018년까지 총 49건의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열린재정' website interface. On the left, there's a sidebar with a tree view of categories. A red box highlights the '국유재산' (National Property) category, and a red arrow points to the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and Operation General Report) link. The main content area shows the selected report, with a table of contents and a list of reports. The table lists reports from 2013 to 2018, each with a download link and a search icon.

No	파일명	확장자	사이즈	다운로드
1	2018년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pdf	2.2Mb	47
2	2017년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pdf	2.3Mb	50
3	2016년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pdf	2.5Mb	58
4	2015년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pdf	2.2Mb	105
5	2014년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pdf	2.4Mb	76
6	2013년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pdf	3.3Mb	30

4 기타 정보

국유재산 관련 보도자료 →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

국유재산 관련 재정법령 → 재정자료실 > 재정법령

국유재산 관련 사업설명자료 → 검색창 '국유재산' 검색 > 사업설명자료

국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 등을 찾고 싶을 경우,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에서 '국유재산'을 검색하면 총 113건의 국유재산 관련 보도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과 관련된 법령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정자료실 > 재정법령**에서 총 8건의 관련 법령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재정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국유재산'을 검색해 **사업설명자료**에 들어가면, 국유재산과 관련된 총 273개의 세부사업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총 113건

국유재산

Q 검색

제목	첨부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위한 국유재산...		국유재산정책과	2020-03-24	23
소상공인 임대료의 한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국유...		국유재산정책과	2020-03-04	24
지역경제 활력과 마중물, 국유재산 개발에 박차 (...)		국유재산조정과	2019-12-11	10
2019년도 국유재산 아이디어 공모전 및 건축상 시...		국유재산정책과	2019-12-11	14
제2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국유재산정책과	2019-12-11	12

재정법령

총 8건

선택

국유재산

Q 결과 내 검색

번호	법령명 ▲	법령종류	공표번호 ▲	공표일자 ▲	시행일
8	국유재산법	법률	제15425호	2018-03-13	2019-03-14
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14호	2019-03-14	2019-03-14
6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75호	2019-09-10	2019-09-10
5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정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3호	2009-07-31	2009-07-31

검색어 '국유재산'에 대한 전체 검색 결과는 총 273건 입니다.

사업설명자료(273)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관리]

사 업 명 (3) 국유재산관리(2234-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배상금 지급 - 국유재산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재산의 관리 · 처분 사무를 담당하는 재산 ...

[국토교통부 / 국유재산실태조사]

사 업 명 국유재산 실태조사 (57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토교통부 ...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재산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지원 등 효과적인 국유재산 ...

[조달청 /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사 업 명 (3)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1132-33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조달특별회계 ... ○ 은닉재산 등 권리보전 ③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국유재산법 제12조 및 제77조) 신
고 (국유재산법 제77조) 조 사 무주재산 ...

[문화재청 / 국유문화재관리]

... 속하는 재산의 지속적인 일반관리 및 보호 필요. 문화재 관리단체인 해당 지자체에서 주변의 광범위한 국유문화재
재산도 관리하도록(관리주제 일원화) 경상경비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국유문화재 재산 관리(국유재산 무단점유 등 재산
침해요인 방지 및 산불, 설해 예방 등) □ 주요내용 ...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집행 등 전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예산이 남녀 모두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제도이다.

각 부처에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시스템)을 통해 성인지예산서를

등록·제출·접수·확정하고, 예산 집행 후에도 역시 dBrain시스템에서 성인지결산서의 작성·발행·확정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번호에서는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조금 낡은 성인지예산제도와

dBrain시스템에서의 성인지예·결산보고서 작성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1 개요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에 따르면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산은 의도하지 않게 성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손실을 미치게 되므로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제고는 물론, 국가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인지예산제도’는 참여정부에서 재정개혁 차원에서 도입하였으며,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집행 후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는 성인지결산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011회계연도부터는 기금에 대해서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안을 첨부하였으며, 약 10여 년 동안 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왔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각 지자체가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표 1. 성인지예산제도 추진 경과

년도	내용
1998년	• 여성단체들의 예산운동 일환으로 전체 예산 대비 여성 관련 예산을 분석하고 정부와 정당에 ‘대안예산안’을 제출하기 시작
2002년	•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성인지적 예산 정책 마련을 위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 • 국회여성위원회에서 ‘성인지적 예산 편성 및 여성 관련 자료 제출 촉구 결의안’ 채택, 11월 본회의 의결
2003년	• 기획예산처에서 보육예산 확대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킨다는 내용을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
2006년	•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제출 조항 마련 (2010회계연도 예산안 편성부터 시행)
2009년	•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최초 작성
2010년	• 「2011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최초 작성
2011년	• 「201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최초 작성
2019년	• 「2018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 41개 기관 345개 세부사업, 35조 1,815억원 집행 •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20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 35개 기관 284개 세부사업, 31조 7,963억원 편성

자료: 기획재정부 외(2020), 「2019년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2 _____ 성인지예산서란

2010회계연도부터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성인지예산서』는 사업(예산)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 제26조)이며, 국가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성인지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구분	내용
직접목적 사업	○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등
간접목적 사업	○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

최근에는 성평등 이슈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면서 성불평등한 사회구조의 근본적 개선에 대한 요구 및 정부의 여성폭력 대응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에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은 관계부처·상설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선정된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을 포함하여 별도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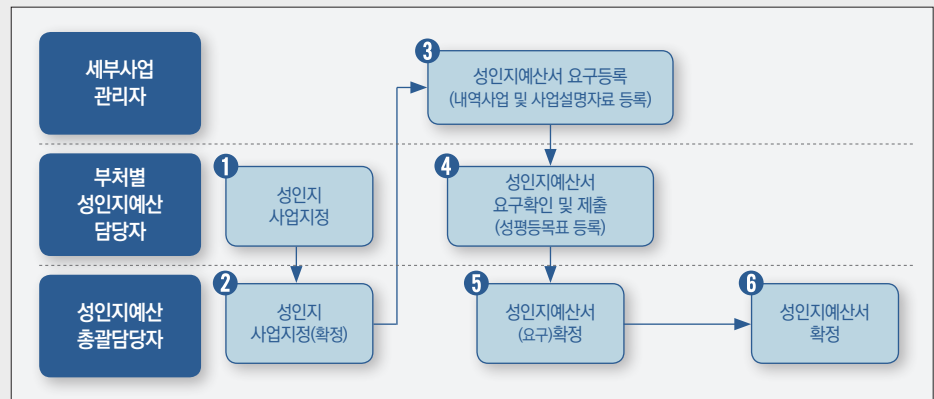
* 2020년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관한 사업

대상사업을 가진 부처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목차	내용
1. 성평등 목표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부처별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기술
2. 사업 총괄표	○ 회계, 세부사업, 2019년 및 2020년 예산현황 작성
3. 사업별 설명자료	○ 사업목적, 내용, 정책대상, 부처 성평등 목표와의 연관성, 성별 수혜분석, 성과목표,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현황 등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

dBrain시스템은 해당 부처가 성인지예산서를 효율적으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도록 성인지 사업 지정에서부터 성인지예산서 요구등록, 제출, 접수 및 확정 of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1. dBrain시스템에서의 성인지예산 업무 처리 프로세스



① 부처별 성인지예산 담당자가 성인지사업으로 미지정된 세부사업을 조회하여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지정	
② 성인지예산 총괄담당자가 부처별 성인지예산 담당자가 지정한 성인지 대상사업을 확정	

- ③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관리자가 내역사업,
사업별 설명자료 및
출력정보 등을 등록

2020		일반회계/일반 지방행정/행정 공통/경제정책/소방차량관련/소방차량관련					
2019 당초		2019 최종		2020 요구		2020 정부안	2020 확정
1,013,000 원천		1,013,000 원천		1,013,000 원천		0 원천	0 원천
사업/정책사업		사업내역		성별/분류/정책		성과자료	
※ 예산 대응 시 계관하지 않는 정보는 사라집니다.							
내역사업관련 여부 ☒				유역장보통목 추가 삭제 (단위 : 천원)			
지정특별사업 여부	일반특별사업 여부	국가보통목 사업 여부	사업내역사업명	2019년 당초	2019년 최종	2020년 요구	2020년 정부안
1		경제개발	경제개발 내역사업	500,000	550,000	600,000	0
2		문화정보	문화정보 내역사업	200,000	250,000	300,000	0
3			합계	700,000	800,000	900,000	0

- ④ 부처별 성인지예산 담당자가
예산/기금별로 작성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전체 성평등
목표를 등록하고 성인지예산
총괄담당자에게 제출

[illegible]

- ⑤ 부처에서 작성된 성인지사업
설명자료를 성인지예산
총괄담당자가 확인하고
확정 처리

신청년도: 2020 | 분반: |
 연구학군부: 교육 |
 학년/기종: 전체 |
 학년/기종: 전체

소관: |
 학년: |
 학기: |
 학년/기종: 전체

2년 차자가 검색 되였습니다.

통합보고서출력

번호	소관	학년	학년/기종	보고서	상태	학급일자
1	[1] 기피대상부	(1) 해산	중수	중수	중수	
2	[1] 기피대상부	(1) 해산	중수	중수	중수	

- ⑥ 성인지예산 총괄담당자가
확정한 성인지예산서를
부처별로 취합해서 정부안을
확정 처리

회계년도 2021 ▼ 분반 ▼ 회계장부종류 장부 ▼ 회계/과목 전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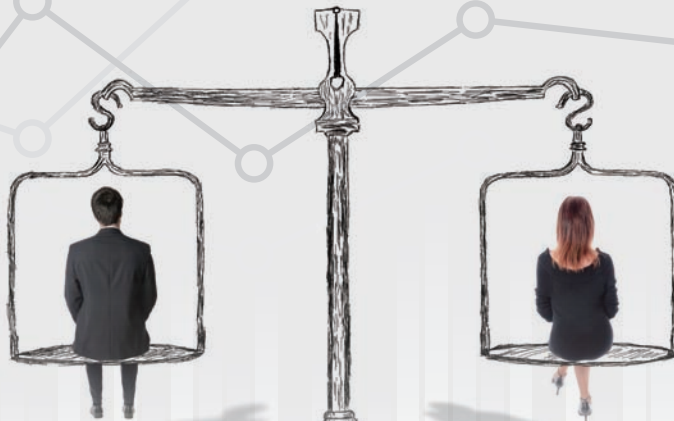
소문 1 ▶

회계장부종류 장부 ▼ 회계/과목 전체 ▼

2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오구서재 ▶ 출판보고서등록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번	소문	회계	회계장부	보고서	상세	작성일자						
1	111	회계장부	(1) 회산	제출	Y	Y						
2	111	회계장부	(5) 과금	제출	Y	Y						



◎ 2020년도 성인지예산 관련 주요 현황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기금운용계획 포함)의 대상사업은 35개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284개로서 예산 전체규모는 31.8조원이다. 회계별로는 예산사업이 211개 사업, 18.0조 원이며, 기금사업이 73개 사업, 13.8조원이다.

표 2. 2020년 성인지 예산

구분		2019년(A)	2020년(B)	증감(B-A)	증감률(%)
중앙관서 수(개)		33 (33)	35	2 (2)	6.1 (6.1)
합계	예산(억원)	254,203 (266,777)	317,963	63,760 (51,186)	25.1 (19.2)
	사업 수(개)	261 (261)	284	23 (23)	8.8 (8.8)
회계	예산(억원)	136,007 (138,689)	179,838	43,831 (41,149)	32.2 (29.7)
	사업 수(개)	192 (192)	211	19 (19)	9.9 (9.9)
기금	예산(억원)	118,196 (128,088)	138,125	19,929 (10,037)	16.9 (7.8)
	사업 수(개)	69 (69)	73	4 (4)	5.8 (5.8)

주: 괄호 안은 2019년 추경 포함 기준임

자료: 대한민국정부(2019),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을 보면 ①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직접목적 사업이 89개 사업에 11.8조원 ②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간접목적 사업이 195개 사업에 20.0조원이 반영되었다.

표 3. 2020년 대상별 성인지 예산 비교

구분		2019년(A)	2020년(B)	증감(B-A)	증감률(%)
합계	예산(억원)	254,203	317,963	63,760	25.1
	사업 수(개)	261	284	23	8.8
직접목적 사업	예산(억원)	90,696	118,233	27,537	30.4
	사업 수(개)	89	89	-	-
간접목적 사업	예산(억원)	163,507	199,730	36,223	22.2
	사업 수(개)	172	195	23	13.4

자료: 대한민국정부(2019),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3 성인지결산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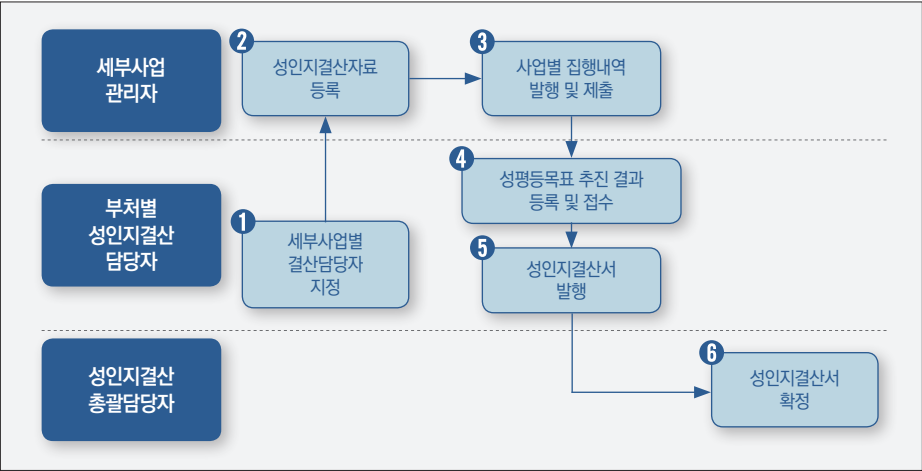
『성인지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업(예산)의 수혜를 받았는지 또한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국가재정법」 제57조)로,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이 성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

대상사업을 가진 부처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목차	내용
1. 개요	- 성평등목표, 성평등목표 추진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술 - 세부사업의 결산결과를 성인지결산 사업 총괄표를 통해 정리 - 최근 3개년 성과목표 수, 예산집행 후 실제 목표달성 수 및 목표달성률
2. 사업별 집행내역	-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목적, 정책대상, 성평등 목표 -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명시 및 이에 대한 집행실적 - 세출예산현액과 지출액을 성별로 나누어 성평등 효과분석 - 최근 3개년의 성과목표(지표), 목표치, 실적치와 달성여부 - 성평등 현황 및 추진실적, 결과에 대한 원인, 향후 개선사항 등의 자체평가

해당 부처는 시스템에 등록된 성인지예산서 내역 및 해당 사업의 집행 내역을 참조하여 성인지예산서 내역 연계에서부터 결산담당자 지정, 성인지결산서의 작성·발행 및 확정과정 전 과정을 dBrain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다.

그림 2. dBrain시스템에서의 성인지결산 업무 처리 프로세스



- ① 부처별 성인지결산 담당자가
세부사업별로 결산을 담당할
세부사업관리자를 지정

- ② 세부사업관리자가 사업별로
사업개요, 집행실적,
성평등효과 분석, 성과목표
달성 현황 등의 결산자료를
등록

- ③ 세부사업관리자는 등록된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저장하여 부처별
성인지결산 담당자에게 제출

- ④ 부처별 성인지결산 담당자는
성평등목표 추진 결과를
등록하고 세부사업관리자가
제출한 보고서 형태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접수 처리

- ⑤ 부처별 성인지결산 담당자가
보고서를 발행하여 총괄표 등을
확인 검토

⑥ 성인지결산 총괄담당자는
부처별 성인지결산 진행 현황을
확인 후 확정 처리

회계연도	2017	년	소관			
조달구분	중앙관서 결산확정					
			예산인원계	예산인원계취소	검토편표	검토편표취소
번역	대상소관	예산인원계	검토편표	중앙관서총계	중앙관서결산확정	세무대국(외포)
8	022 통일부	2018-01-08	2018-01-11	2018-02-28	2018-02-28	세무대국
9	023 법제처	2018-01-08	2018-01-11	2018-03-12	2018-03-12	세무대국
10	024 국가보훈처	2018-01-08	2018-01-11	2018-02-28	2018-02-28	세무대국
11	025 산림청	2018-01-08	2018-01-11	2018-02-22	2018-02-28	세무대국
12	026 국세청	2018-01-08	2018-01-11	2018-02-23	2018-03-02	세무대국
13	027 경제청	2018-01-08	2018-01-11	2018-02-19	2018-02-28	세무대국
14	028 병무청	2018-01-08	2018-01-11	2018-02-20	2018-02-27	세무대국
15	029 농림수산청	2018-01-08	2018-01-11	2018-02-27	2018-02-28	세무대국
16	031 국무청	2018-01-08	2018-01-11	2018-02-20	2018-02-25	세무대국

◎ 2019회계연도 성인지결산 관련 주요 현황

2019회계연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예산·기금)은 33개 중앙관서의 261개 사업이며, 집행 규모는 예산현액(27.5조원) 대비 98.4%인 27.1조원으로 전년(35.2조원) 대비 8.1조원 감소하였다.

표 4. 2019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구분		2018년 집행액 (A)	2019년			2018년 대비 (C-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100	
합계	집행규모(억원)	351,815	275,388	271,113	98.4	△80,702
	기관 수(개)	41		33		△8
	사업 수(개)	345		261		△84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집행규모(억원)	231,111	141,290	140,091	99.2	△91,020
	기관 수(개)	41		32		△9
	사업 수(개)	260		192		△68
기금	집행규모(억원)	120,704	134,098	131,022	97.7	10,317
	기관 수(개)	16		14		△2
	기금 수(개)	29		25		△4
	사업 수(개)	85		69		△16

자료: 대한민국정부(2020), 「2019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성인지 대상사업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제28조의2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중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업으로, 2019회계연도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업들이 포함되었다.

①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성평등 실현정책을 기획하는 국가계획인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는 사업 등

②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및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정부 정책의 성별 영향을 분석하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표 5. 2019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유형별 집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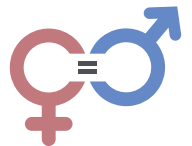
(단위: 개, 억원, %)

구분	사업 수	2019		집행률 (B/A)
		예산현액 (A)	지출액 (B)	
합계	261	275,388	271,113	98.4
① 직접목적 사업	89	97,215	95,581	98.3
② 간접목적 사업	172	178,173	175,532	98.5

자료: 대한민국정부(2020), 「2019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4 맺음말

앞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은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기관인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과 상호협조체제를 갖추고,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에 맞추어 dBrain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정부가 남녀의 서로 다른 정책수요를 고려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고 효율적인 성인지예·결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주재선·이동선·송치선·한진영(2019). 2019 한국의 성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선주·이택면·김영숙·김효주·성민정·권도연·김병관·김해람·안주희·김수지(2019).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성인지예산제도(20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 윤영진·이재인·이재원·김은정(2008).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체계와 실행전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택면 외(2016).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기획재정부 외(2019).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 기획재정부 외(2020). 「2019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 대한민국정부(2019).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 대한민국정부(2020). 「2019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인권’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인권침해’, ‘여성인권’, ‘인권유린’ 등이 연관어로 도출되었다. 이른바 ‘n번방’으로 총칭되는 디지털 성범죄,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성소수자 인권보호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서는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이달의 이슈키워드

인권



연관어

인권침해

여성인권

인권유린

여성

남자

문제

노력

범죄

수사

가해자

피해자

사건

주범

아동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에 따르면, 인권은 ‘모든 법에 앞서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전담기관: 국가인권위원회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전담 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 독립기관¹으로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헌법상 독립기관²과는 다르게 중앙관서로 간주되어 예산편성 시 「국가재정법」 제40조(독립기관의 예산³)를 따르지 않는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된다. 주요 업무로는 정책, 조사·구제,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등이 있다.

위원회는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선출 4인(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총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2020년도 인권 관련 주요 사업

위원회는 2020년 업무목표를 ‘어떤 사람이든 존엄한 존재임을 사회와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정했다. 2020년에 추진하는 다양한 인권보호 사업과 예산은 다음과 같다.

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한다.

²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을 의미한다.

³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시 독립기관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독립기관장과 협의하여 편성해야 한다.

인권보호 관련 주요 사업 예산

(단위: 억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지출액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인권의식 증진	9.5
	지역 인권문화 확산	4.7
인권교육 활성화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8.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2.2
	취약 분야 인권개선	17.8
	장애인 인권증진	6.5
인권제도 선진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2.2
	북한인권 개선	2.2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0), 2020년도 예산 및 기금 운영상황 사업별 설명자료 재구성

주요 단위사업으로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14.2억원), 인권교육 활성화(18.3억원),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26.5억원), 인권제도 선진화(14.4억원) 등이 있다.

▶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의 세부사업으로는 인권의식 증진, 지역 인권문화 확산 등이 있다.

‘인권의식 증진(9.5억원)’은 인권에 대한 홍보 및 문화 조성을 통해 의식증진,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격월로 「인권」 잡지 및 웹진을 배포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위원회를 알리고 인권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그 외에도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인권작품 공모, 인권의 날 행사 등 국민의 인권의식 증진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인권문화 확산(4.7억원)’은 인권체험단 운영, 주민 참여형 인권문화 확산, 인권문화 조성 네트워크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민·학생 등에게 다양한 인권 주제의 예술작품체험을 제공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사업 및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지역 주요 인권 의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있다.

▶ 인권교육 활성화

‘인권교육 활성화’의 세부사업인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8.3억원)’은 다양한 인권교육의 기획, 개발, 운영 등의 사업이다. 인권교육 현황을 모니터링해 인권교육의 내실화 및 체계

화를 위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권고하는게 목적이다. 또한,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 및 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하는 등 교육 기반을 조성한다. 인권교육 수요에 맞춰 교육 대상·내용·수준별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인권강사를 양성하는 것도 주요 업무이다. 아울러, 인권 연수과정, 사이버 인권교육 등의 운영을 통해 학교·공공·시민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의 인권의식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의 세부사업으로는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취약 분야 인권개선, 장애인 인권증진 등이 있다.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2.2억원)’는 인권침해 및 차별 등과 관련해 전문상담원을 교육하고, 전문상담위원을 둬으로써 인권상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순회상담’을 병행한다.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및 화상상담 시스템을 통해 전화상담도 제공하고있다.

‘취약 분야 인권개선(17.8억원)’은 아동, 여성, 이주민, 스포츠 인권 등 다양한 취약 분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조사, 군인인권에 대한 조사 등을 포함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혐오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 차별적 제도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증진(6.5억원)’은 장애인의 인권 보장 및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애인 차별예방 모니터링 및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등을 통해 장애차별을 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인권제도 선진화

‘인권제도 선진화’의 세부사업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북한인권 개선 등의 사업이 있다.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12.2억원)’은 인권정책의 개발 및 개선을 통해 다양한 인권의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민사회의 인권 인식 제고 및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제인권 기준의 실효적 국내이행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 환경변화에 맞춰 정보인권이 보호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인권정책을 지원함으로써 인권경영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2.2억원)’은 북한인권 정책의 개발과 북한인권 국제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또한, 북한인권에 대한 시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유엔(UN) 차원의 조사위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국제공조 등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국의 재정 현황을 조사·분석·전망하고 재정건전성 방안을 제시하는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발간한다. 이번호에서는 「IMF Fiscal Monitor, April 2020」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각 주제는 첫째, 각국 정부의 COVID-19의 대유행(Pandemic)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둘째, 대유행으로 인한 대봉쇄(Great Lockdown) 기간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제언들(IDEAS), 마지막으로 정부의 효과적인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 활용 정책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규식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gsjeon@kpfis.or.kr)

IMF 재정점검보고서

「IMF Fiscal Monitor, April 2020」



1. COVID-19 대유행(Pandemic)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

이번 COVID-19 대유행이 저물거·저금리로 세계 경제 전망이 부진한 가운데 발생하면서 각 국 정부는 위기 극복 차원에서 상당한 수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IMF 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각종 소득손실·실업·파산으로부터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 며, 동시에 대유행에 따른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IMF는 최근 대유행으로 인해 인적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각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대유행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결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검사와 치료에 관한 충분한 지출’과 ‘국제적인 협력체계 확립’을 꼽았다. 특히 국제적인 협력체계 확립에 관해서는 보건 역량이 취약한 국가에 대한 각종 자금 지원과 보편적으로 구매 가능한 저렴한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국내외 집단 방역의 핵심요소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집단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유급 병가, 실업 급여, 세금 납부 유예 등과 같이 광범위하면서, 적시적이고, 한시적이며, 명확한(Large, Timely, Temporary and Targeted)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동시에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역시 파산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IMF는 이번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한 G20 국가들의 재정지출 규모가 GDP 대비 약 3.5% 수준(2020년 4월 8일 기준)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는 각종 보건 지출과 개인·기업을 위한 세제지원 및 각종 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출 규모가 약 3.3조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COVID-19 대유행(Pandemic)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G20국가들의 재정 정책 규모

그림 1. 정부의 수입·지출을 통한 정책대응 규모

(단위: GDP 대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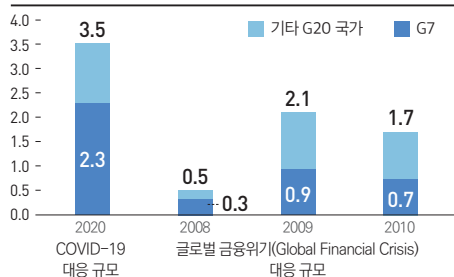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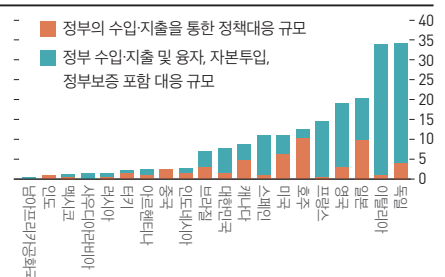


그림 2. 정부 수입·지출 및 융자, 자본투입,
정부보증 포함 대응 규모

(단위: GDP 대비 비중, %)



주: 2020년 4월 8일 기준, IMF Staff 추정치

자료: IMF(2020), 「Fiscal Monitor, April 2020」, Figure 1.1.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 대응으로 인해 거의 모든 국가의 2020년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 중국, 그리고 몇몇 유럽과 기타 아시아 국가의 경우 올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출로 인해 심각한 재정수지 악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이러한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과 재정 적자 심화가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몇몇 국가의 경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가령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뿐만 아니라 금융 상황 및 대외경제 여건 악화(대외수요 감소, 상품가격 하락 등)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경제적 충격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IMF는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경우에는 공공서비스(교통, 에너지, 통신), 사회보장성 지출은 일정수준 유지하면서 보건 분야에 대한 지출 우선순위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표. 국가별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부채 추이

(단위: GDP 대비 비중,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망치 2020
일반정부 재정수지	세계	-3.8	-2.9	-2.9	-3.3	-3.4	-3.0	-3.1	-3.7	-9.9
	선진국	-5.5	-3.7	-3.1	-2.6	-2.6	-2.3	-2.6	-3.0	-10.7
	미국	-8.0	-4.6	-4.0	-3.6	-4.3	-4.5	-5.7	-5.8	-15.4
	유로지역	-3.7	-3.0	-2.5	-2.0	-1.4	-0.9	-0.5	-0.7	-7.5
	프랑스	-5.0	-4.1	-3.9	-3.6	-3.5	-2.8	-2.3	-3.0	-9.2
	독일	0.0	0.0	0.6	0.9	1.2	1.2	1.9	1.4	-5.5
	이탈리아	-2.9	-2.9	-3.0	-2.6	-2.4	-2.4	-2.2	-1.6	-8.3
	스페인	-10.7	-7.0	-5.9	-5.2	-4.3	-3.0	-2.5	-2.6	-9.5
	한국	1.5	0.6	0.4	0.5	1.6	2.2	2.6	0.9	-1.8
	일본	-8.6	-7.9	-5.6	-3.8	-3.7	-3.1	-2.4	-2.8	-7.1
	영국	-7.6	-5.5	-5.6	-4.6	-3.3	-2.5	-2.2	-2.1	-8.3
	캐나다	-2.5	-1.5	0.2	-0.1	-0.5	-0.1	-0.4	-0.4	-11.8
	신흥 개발도상국	-0.9	-1.5	-2.5	-4.4	-4.8	-4.1	-3.8	-4.8	-9.1
	저소득 개발도상국	-2.0	-3.3	-3.2	-3.8	-3.7	-3.6	-3.8	-4.1	-5.7
일반정부 부채	세계	79.6	78.3	78.6	79.7	82.7	81.3	81.5	83.3	96.4
	선진국	106.7	105.2	104.6	104.2	106.7	104.5	103.9	105.2	122.4
	미국	103.3	104.9	104.6	104.8	106.8	105.9	106.9	109.0	131.1
	유로지역	90.7	92.6	92.8	90.8	90.0	87.8	85.9	84.1	97.4
	프랑스	90.6	93.4	94.9	95.6	98.0	98.4	98.4	98.5	115.4
	독일	81.1	78.7	75.7	72.1	69.2	65.3	61.9	59.8	68.7
	이탈리아	126.5	132.4	135.3	135.3	134.8	134.1	134.8	134.8	155.5
	스페인	86.3	95.8	100.7	99.3	99.2	98.6	97.6	95.5	113.4
	한국	30.8	33.7	35.5	37.3	37.6	36.7	37.9	40.7	46.2
	일본	228.7	232.2	235.8	231.3	236.4	234.5	236.5	237.4	251.9
	영국	83.2	84.2	86.2	86.9	86.8	86.2	85.7	85.4	95.7
	캐나다	85.4	86.1	85.6	91.2	91.7	90.5	89.7	88.6	109.5
	신흥 개발도상국	37.0	38.2	40.3	43.7	46.5	48.0	49.7	53.2	62.0
	저소득 개발도상국	31.1	32.2	32.2	36.4	40.2	42.3	42.6	43	47.4

주: 일반정부란, 중앙 및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하는 개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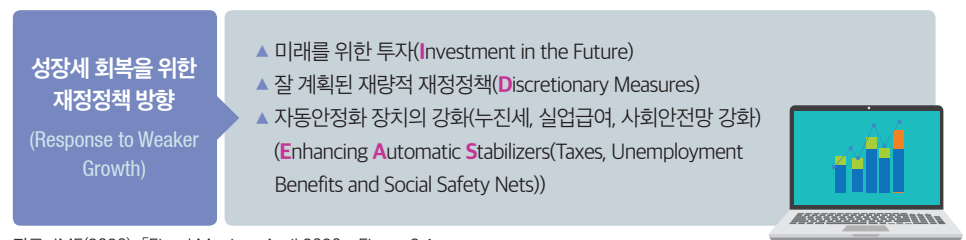
자료: IMF(2020), 「Fiscal Monitor, April 2020」, Table 1.1, 1.2, A1

IMF는 현재까지 COVID-19가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보고있다. 가령 대유행(Pandemic)의 지속 기간, 경기 회복의 속도, 경기침체의 장기화 가능성 등에 따라 COVID-19가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있다. 그리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공공부문을 통한 각종 자금지원과 보증 등의 재정지원이 이례적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적 제언들(IDEAS)¹

IMF는 COVID-19로 인해 약화된 성장세를 회복하고, 거시경제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IDEAS)을 제시하였다. 각 제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 시스템, 인프라 구축, 저탄소 기술, 교육, 연구 분야 등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 for the Future), ▲잘 계획된 재량적 재정정책(Well-planned Discretionary Policies)의 시행, ▲누진세, 실업급여 등과 같은 소득과 소비 안정을 위한 자동안정화 장치의 강화(Enhance Automatic Stabilizer) 등과 같다. IMF는 이러한 제언들이 약화된 성장세를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재정정책의 뼈대(Framework)라고 소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위축된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림 3. 성장세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



자료: IMF(2020), 「Fiscal Monitor, April 2020」, Figure 2.1

IMF가 제시한 세 가지 뼈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미래에 대한 투자(Invest for the Future)의 경우 국가별 경제 규모와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재정정책의 투자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재정 여력이 충분한 선진국에서는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향후 투자 성과에 따라 공공부문 순자산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언했다.

1. 'IDEAS'는 Invest for the Future(미래를 위한 투자), Well-planned Discretionary Policies(잘 계획된 재량지출), Enhance Automatic Stabilizer(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 강화)의 첫 글자들을 따온 것으로, COVID-19 극복 이후, 성장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재정정책 기초를 의미한다.

반면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선진국의 경우 보건 관련 시스템·인프라·인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수입과 지출 구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높은 부채 수준과 개발 자원(Financing Development) 이자지출을 감당한 투자가 실시되어야 하며, 저소득국가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수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잘 계획된 재량적 재정정책(Well-planned Discretionary Policies)에서는 경제 위기 국면에서 정책시차로 인해 대응이 늦어지거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해야 할 조치를 설명했다. IMF는 정부가 재량정책의 시차를 줄이고,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심리를 형성시키기 위해 대유행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시행 가능한 공공투자사업들을 미리 계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공공투자사업은 사업 시행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전반적인 사업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요소들을 파악하며,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재량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 강화(Enhance Automatic Stabilizer)에서는 실업급여제도 및 사회안전망의 확대·개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IMF는 실업급여제도가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가계의 소득을 보호하고, 회복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에스토니아나 미국이 자국의 복지 시스템을 OECD 국가들의 중간수준(Median Level)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들의 소득 손실을 1/3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안전망 정책은 적용 범위와 혜택을 적시에 확대한다면, 취약계층의 소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정책이 선별적이며, 조건부인, 소득·자산검증에 기초한(Selective, Conditional and Means Tested) 최저임금제도²라고 소개하였다.

3. 정부의 효과적인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 활용 정책

IMF는 정부가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을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제시하였다. 지난 10년간 공기업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경제적 규모는 약 45조달러 수준이다. 공기업은 주로 물, 대중교통, 전기 등과 같은 사회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흥 개발도상국에서는 종종 특수은행의 형태로

² 최저임금제도는 선별적(Selective, 저소득 가구에 중점을 둠), 조건부(Conditional, 수급자가 구직 또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됨), 소득 자산검증 기반(Means Tested, 가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지급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도(Universal Basic Income Scheme)와는 다르다.

가계, 농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민간과 공공의 성격을 모두 지닌 공기업의 특수한 지위로 인해 공기업이 과대평가 되거나, 몇몇 국가의 정부에서는 적절한 관리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기업이 경기둔화 또는 침체의 원인이 되거나 대규모 자금투입이 필요한 구제금융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IMF는 이러한 문제점들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공기업에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공기업 관리의 핵심 원칙이 공공 자원(Public Resource)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는 공기업의 운영 및 활동 범위의 타당성, 국민들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령 민간 기업이 효율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적인 산업 부문에서는 공기업 운영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대국민 제공 서비스도 민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 민영화에 앞서 매각의 건전성 확보와 민영화 이후 적절한 규제 방안 등의 제도가 사전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각국 정부는 경제성장 촉진, 공적자금의 효과적인 집행 차원에서, 공기업-민간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의 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산업분야별 민간기업 대비 공기업 성과

그림 4.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³

(단위: 민간기업 대비 공기업 성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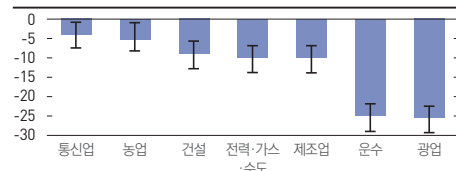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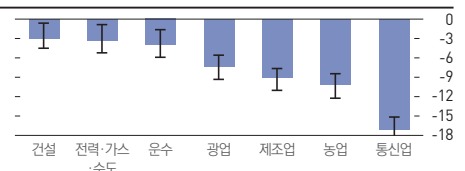


그림 5. 생산성(Productivity)

(단위: 민간기업 대비 공기업 성과, %)



주: 1) 생산성(매출액 대비 직원 수)의 '매출액'은 2017년 물가 기준

2) 공기업(SOE)의 기준은 공공부문 지분이 50~100%인 기업이며, 자료 기간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 IMF(2020), 「Fiscal Monitor, April 2020」, Figure 3.15.

IMF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공기업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향후 부패 척결, 친환경 정책,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구하고 같은 아젠다(Agenda)를 이행하는데 공기업이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공기업이 이러한 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공기업 운영 분야를 엄격하게 선별하고,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필요하며,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때, 비로소 공기업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IMF는 권고했다.

³ 자기자본이익률(ROE)이란, 기업이 투입한 자기자본 대비 이익률이 어느 정도 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frac{\text{당기순이익}}{\text{자기자본}} \times 100$ 의 공식을 통해 산출한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디지털 경쟁력을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사회 구현 제도 개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여 년 만에 전자서명제도를 개편하였으며 기존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전환 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담당: 김상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gkim@kpfis.or.kr) 글: 정재림 일러스트: 강태이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전자서명제도 개편

그동안 전자서명을 이용하려면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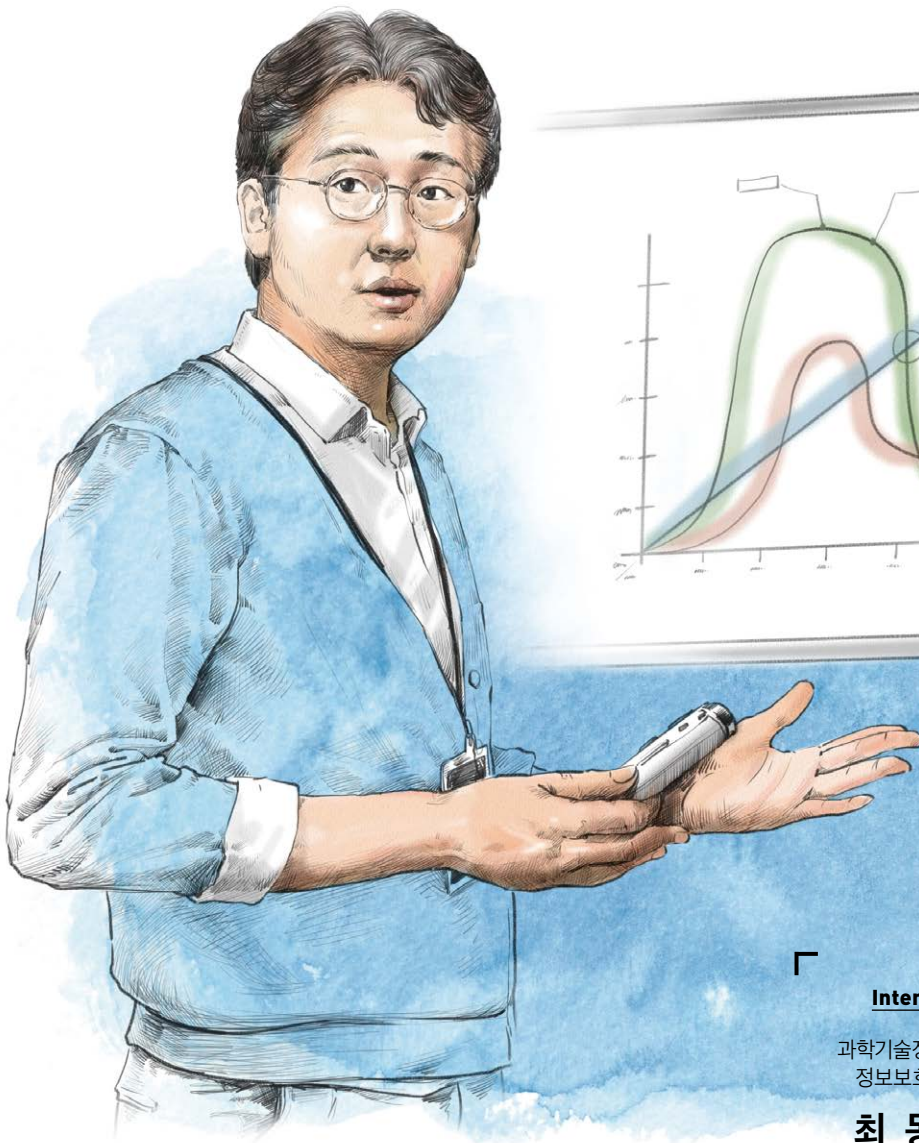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최동원 과장을 만나 전자서명제도 개편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전자서명법」을 새롭게 개편하다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된 이래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우리나라 인터넷의 활성화와 국가정보화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은 공인인증서가 20년 넘게 유지되며 전자서명 시장의 독점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월한 법적 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신기술 전자서명의 시장진입을 저해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기존 공인인증서의 액티브X 및 실행파일 설치, 복잡한 암호 이용 등의 불편으로 이용자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동원 정보보호기획과장은 “이러한 공인인증서의 불편 해소와 편의성, 신뢰성이 높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활성화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여 년 만에 전자서명제도를 개편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인인증제도 개선정책 발표(2018년 1월) 이후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 해커톤(2018년 2월 1일~2일)을 개최하는 등 법률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검토 회의를 수차례 거치면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마련됐다.



Interview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최 동 원

과장



「전자서명법」 개정법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수단에 자율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전자서명 사업자들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다

최동원 과장은 “올해 5월 20일에 통과된 「전자서명법」 개정법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수단에 자율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전자서명 사업자들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곧 국민들이 더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확대되었다는 의미로도 이해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한 것이며, 둘째는 신뢰성 있는 전자서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 업무의 평가 및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셋째는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최동원 과장은 이러한 변화로 “앞으로는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히 개발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기술의 확산은 IoT 기기 등 사물 간 인증과 관련한 혁신적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전망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국제통용 평가 기준에 맞춘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인정제도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국한된 전자서명이 아닌 국제시장을 선도하는 전자서명 기술 개발 및 이용 촉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갑작스런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어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용기관과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동원 과장은 “이번 개정이 개발자와 이용자의 편의 제공 외에도 비대면 서비스가 중요해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증기술 발전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겁니다.”라고 덧붙이며, 앞으로도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과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 최선을 다하여 제도 변화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국민에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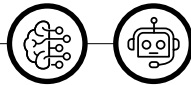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 마련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김혜인 서기관을 만나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계획을 들어봤다.



초연결 지능화 혁신을 도모하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신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신기술의 핵심동인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약자를 따서 DNA(Data, Network, AI)라고 이름 붙였다. DNA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정보화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제·사회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정부와 기업, 개인 등의 경제 주체가 모두 초연결 사회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김혜인 서기관은 “초연결 지능화 혁신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적인 추진체계와 법 제도적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개편된 개정안은 초연결 사회에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게 된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기술, IoT 기술,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을 포괄하여 지능정보 기술이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이어 지능정보화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응 기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중요성에 주목했습니다. 데이터 유통활성화와 전문기업 육성 등 데이터 생산부터 수집·유통·활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성화 시책과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미래를 준비하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는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민간전문가를 교수로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교원과 연구원의 휴직과 겸임·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도 담고 있다. 이는 그간 학계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AI 전문인력 및 우수 교원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향후 5년간(2018~2022년) 석박사급의 AI 인재 7.2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핵심 알고리즘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석박사급 연구자부터 인공지능 산업에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자까지 다양한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김혜인 서기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통과 후에도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작업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AI 시대의 법·제도를 갖추기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일(법 공포 후 6개월)에 맞추어 시행령 등의 하위법령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AI 미래사회 법제정비단’을 운영하여 AI 활용 분야에서 선제적인 법제 정비안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AI 시대의 합리적인 법체계를 갖추기 위함이다.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해 이루어갈 목표는 지난해 발표된 ‘AI 국가전략’과 맞닿아 있다. 인공지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적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높은 교육 수준과 신기술 수용성,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 및 제조기술이라는 우리의 강점을 살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경제적으로 도약하고 더 나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김혜인 서기관은 “과거에 「정보화촉진 기본법」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5년간 IT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틀을 마련해준 것 같이, 「지능정보화 기본법」도 향후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 Interview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김 혜 인

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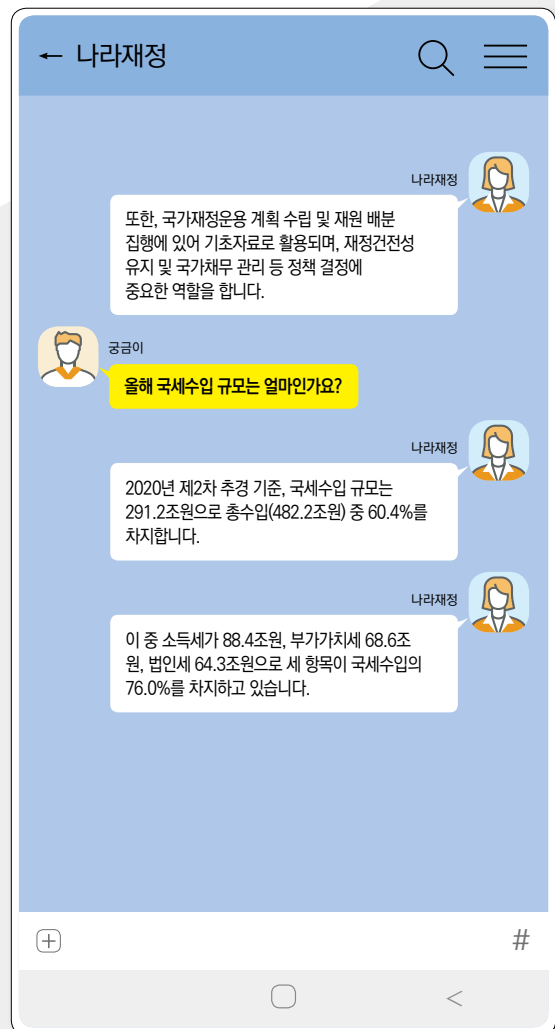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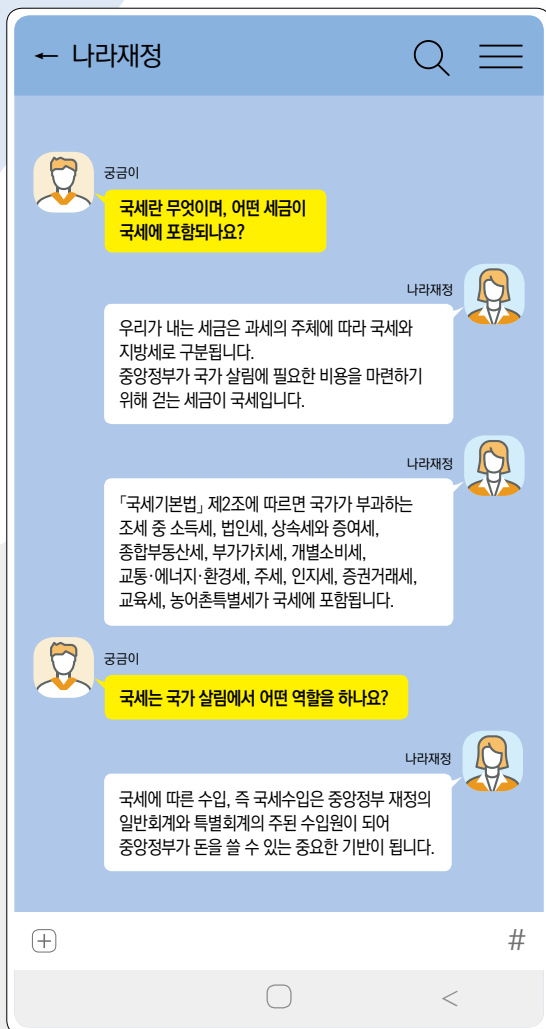
초연결 지능화 혁신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적인 추진체계와 법 제도적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국세수입이란 무엇일까요?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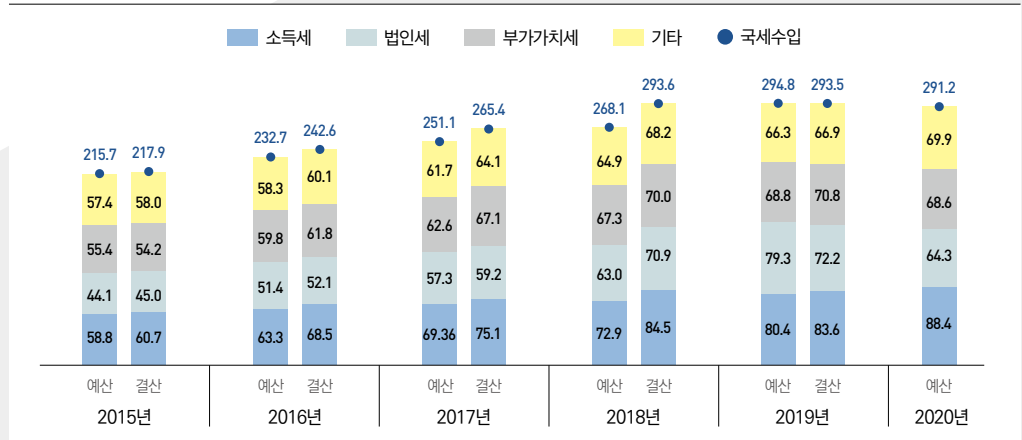
우리가 내는 세금은 과세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중앙정부가 국가 살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 국세이며 그에 따른 수입을 국세수입이라고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말합니다.



주요 세목별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주: 예산은 2019년까지 최종예산, 2020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직장인들은 이달의 월급을 받을 때마다 ‘소득세’를 내고, 국민들은 누구나 필요한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그 외에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고, 보석·승용차 등을 살 땐 ‘개별소비세’, 주류를 구매할 땐 ‘주세’를 내는 등 우리의 생활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국가 살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며, 그에 따른 수입을 국세수입이라고 부릅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말합니다. 국세는 그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징수된 국세수입은 중앙정부 재정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된 수입원이 되어 중앙정부가 돈을 쓸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또한, 국세수입 예산 및 실적은 국가재정운용 계획 수립 및 재원

배분 집행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채무 관리 등의 재정정책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국세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을 근거로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과세되며 공평과세 실현과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세법」을 근거로 법인 기업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재화 및 용역(서비스)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올해 국세수입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91.2조원으로 전년 대비 3.6조원(1.2%) 감소하였으며, 총수입(482.2조원) 중 60.4%를 차지합니다. 이 중 소득세는 88.4조원(전년 대비 10.0% 증가), 법인세 64.3조원(전년 대비 18.9% 감소), 부가가치세 68.6조원(전년 대비 0.3% 감소)으로 세 항목이 국세수입의 7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Pablo Picasso



Pablo Picasso, <The Weeping Woman>, 1937, Oil on Canvas, 60 x 49cm, Tate Modern, London

큐비즘과 축구공

글. 최병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경제학자의 미술관』 저자

보통 사람들은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의 그림을 볼 때면 조금은 당황하게 된다. 왜냐하면 대가의 그림이 유치원 벽에 붙은 어린아이들의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고 느끼기 때문이다. 피카소는 왜 이렇게 그린 것일까? 그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시선으로 다시 보아야 한다. 그림은 2차원의 평면이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대상은 3차원 공간에 존재하므로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정면, 뒷면, 위, 아래 그리고 옆에서... 피카소는 한 시점에서 바라보아서는 사물의 완전한 형태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사물을 완전한 형태로 그리고 싶어 했고, 입체적 형태의 오브제를 2차원의 평면에 표현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여러 면으로 해체하여 여러 관점에서 다시 재구성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반대의 과정을 거치는 축구공의 제작공정을 생각해보자. 축구공은 3차원의 구(球)의 형태이지만 2차원 평면의 조각을 가지고 만든다. 피카소의 그림은 축구공을 만드는 것과는 정반대의 작업을 필요로 한다. 즉, 그려야 할 대상인 3차원 공간에서의 자연이나 인물을 2차원의 캔버스로 옮겨놓는 작업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작업, '미션 임파서블' 처럼 느껴진다. 어떻게 3차원의 존재를 2차원에 표현할 수 있을까? 피카소는 그의 예술적 영감으로 여러 시점에서 보이는 평면적 형태를 다시 2차원의 캔버스에 재구성 혹은 재배치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불가능한 미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가 1937년에 그린 우스꽝스러운 명작 <우는 여인(The Weeping Woman)>을 보자. 이 그림은 피카소가 어떻게 입체주의 화풍을 완성해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작

전통적 회화에서는
화가의 고정된 단일 시점에 의해서
보는 사람들이 입체적으로
느껴지도록 원근감을 표현하였다.
이 같은 방식은 경제학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Pablo Picasso, 1881~1973

품이다. 그는 여인의 앞모습과 옆모습을 동시에 그리면서 그녀의 고통스런 얼굴을 기하학적 형태로 해체해서 일그러진 표정을 잘 담아내고 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인의 눈물은 뺨을 따라 흘러내리지 않고 그녀의 보랏빛 눈물은 막 떨어질 듯 눈가에 맺혀 있다. 이 눈물방울은 2차원의 평면적인 눈물이 아니라 마치 3차원 그래픽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같은 눈물이다.

피카소가 이처럼 여러 각도에서 사물을 관찰하고 표현하려고 한 이유는 변하지 않는 사물의 본질적 구성을 보여주려는 의욕 때문일 것이다. 어떤 대상을 한 위치와 시점에서만 관찰한다면 그것은 오직 그 사물의 한 부분에 관한 진실만을 담고 있게 될 것이지만, 그는 여러 시점에서 동시에 투시한 오브제를 해체하여 2차원적 화면에 다시 재구성한 것이다. 피카소는 그동안의 전통적인 기법인 '단일 초점에 의한 원근법'을 포기한 것이다. 전통적 회화에서는 화가의 고정된 단일 시점에 의해서 보는 사람들이 입체적으로 느껴지도록 원근감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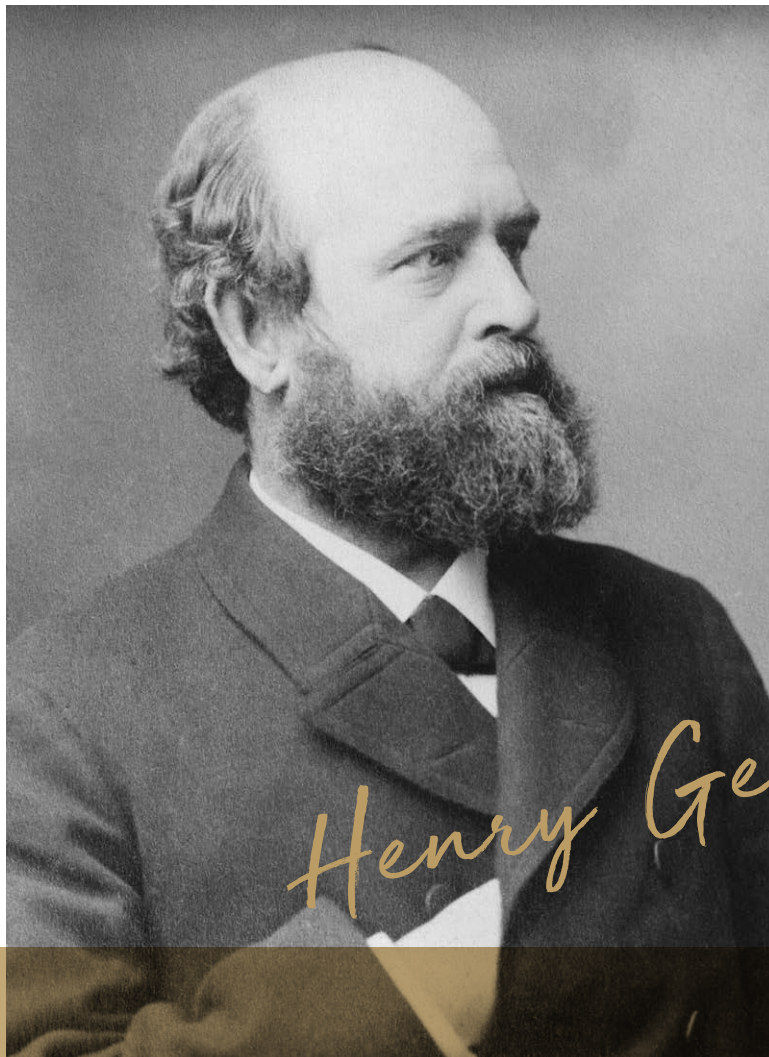
이 같은 방식은 경제학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경제 내에는 여러 형태의 시장이 존재한다. 이 많은 시장의 움직임을 동시적으로 파악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한 시장만을 집중해서 분석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다른 시장들은 일시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경제학자의 시선을 한 시장에 고정시키고 그 시장 내부 움직임을 관찰하는 방식을 '부분균형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이라고 한다. 전통적 회화에서 응용되는 원근법과 같은 고정된 단일시점 방식이 이같이 경제의 부분분석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시장이 동시에 움직이는 현실경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다양한 시장의 변동을 한꺼번에 고려하려면 피카소의 작업방식을 응용해야만 한다. 한 시장의 다른 시장에 대한 영향, 그리고 다른 시장으로부터의 받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고 분석하는 방식을 ‘일반균형이론’(General Equilibrium Theory)이라고 부른다. 피카소는 마치 여러 개의 시장을 동시에 분석하는 일반균형이론을 다루는 경제학자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사실 큐비즘(Cubism)이라고 일컬어지는 입체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은 1907년 피카소가 세상에 내놓은 <아비뇰의 처녀들(Les Femmes d'Alger)>이라는 그림이다. 피카소는 아프리카 조각품을 보고 강렬한 인상을 받았는데 이 작품은 거기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이 그림 속에는 5명의 벌거벗은 여인들이 여러 조각을 붙여놓은 듯한 기하학적인 형태로 그려져 있다. 일찍이 세잔(Paul Cezanne)은 자연의 모든 형태를 구(球)형, 원통, 원추형 등으로 단순화 작업을 시도했는데, 피카소는 이런 세잔의 작업을 뛰어넘어 미술의 근본적인 본질은 형태에 있다고 보고 면들을 재구성하여 입체주의 화풍을 비로소 수립하게 된다. 입체주의란 명칭은 평론가 루이 보셀(Louis Vauxcelles)이 피카소와 함께 입체파의 문을 연 브라크(Georges Braque)의 전시회를 평가하면서 ‘입체(Cubes)’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이 말에서 입체주의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야수파가 색채의 혁명이라면 입체파는 형태의 혁명인 셈이다.

피카소는 일반시장균형상태를 분석하는 경제학자처럼 여러 시점을 통해서 대상의 보이지 않는 면까지 보여주기 위하여 큐비즘의 기법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것이 피카소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같은 형태의 극단적인 해체에 의한 단순화, 추상화를 통하여 피카소만이 그릴 수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점이 바로 피카소가 위대한 이유일 것이다.

파리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독자가 있다면 몽마르트 언덕 올라가는 길에 있는 ‘세탁선’이라고 불리는 ‘바토 라부와’(Le Bateau Lavoir)를 찾아가 보기를 권한다. 피카소나 모딜리아니가 배고픈 시절에 작업활동을 했던 곳이다. 그리고 몽마르트르 언덕 뒷길에 있는 당시 카바레였던 ‘라팡 아질’(Lepin Agil)에도 가보자.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Midnight in Paris)>에서 우디 앨런이 아름답게 보여준 파리의 ‘벨 에포크’(Belle Epoque) 시절 예술가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당장은 가 볼 수 없지만...



Henry George

(1839~1897)

헨리 조지

토지 사회주의의 개척자

글.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가 현장 취재 때마다 주목한 것은
부자동네 바로 뒤에 예외 없이 자리 잡은
‘달동네’였다.



여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헌까지 언급했다. “토지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 부동산이나 투기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19세기 말 토지공개념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던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를 소환한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겸 정치경제학자였던 그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모순을 토지세로 해결하겠다고 나섰던 인물이다.

어린 나이에 학업을 중단하고 선원 생활, 식자공, 인쇄업 등을 전전하며 혼자 경제학을 배운 조지는 신문기자가 되었다. 그가 현장 취재 때마다 주목한 것은 으리으리한 건물 뒷골목에 늘어선 흉물스런 집들, 부자동네 바로 뒤에 예외 없이 자리 잡은 ‘달동네’ 등이었다. 풍요와 함께 빈곤이 공존하는 현상.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젊은 조지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마침내 사회철학의 거대 담론으로 평생의 주제가 되었다.

성장의 열매를 가로채는 땅 부자

조지의 핵심사상은 인구 증가와 기술 개발로 경제가 변명해도 노동과 자본이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제발전의 대부분을 토지소유자가 차지하기 때문이다. 분배를 좌우하는 권력을 지주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를 세계적인 문필가로 만든 책의 제목이 서로 모순되게 들리는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인 이유다. 토지는 인간 존립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이 조지의 인식이다. 토지는 인간의 모든 욕구충족을 위한 물자의 창고일 뿐만 아니라 토지 없이는 노동과 자본도 쓸모없고 산업마저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토지 권력은 필연적으로 독점적일 수밖에 없기에 땅 부자는 성장의 결실을 가로채 경제가 발전할수록 지주는 부자가 되고 자본과 노동은 가난해진다고 한다.

지주의 소득 자체는 본질적으로 불로소득이라고 한다. 토지는 사람이 생산한 것도 아니고 또 토지 가치는 주로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기여와는 무관한 요인, 즉 토지의 자연적 형질과 환경, 사회경제적 변화, 정부의 조치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유에서다. 토지에서 생겨나는 소득은 불로소득이기에 전부 환수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그가 제안한 것이 지대에 100% 과세다. 토지세는 ‘자연이 공짜로 준 기회의 독점’을 없애서 부와 권력의 부자연스런 불평등을 해소하고 고질적인 빈곤을 퇴치하므로 가장 정의로운 조세라는 것이 조지의 설명이다.



1890년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를 홍보하는 마차 슬로건(위)
헨리 조지의 묘가 있는 미국 브루클린 그린우드 공동묘지(아래)

조지의 사상에는 토지 가치는 토지의 자연적 형질과 환경, 인구증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 정부의 토지 정책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대는 불로소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에 대한 그의 인식은 옳지 않다. 토지의 자연적 형질 등 토지 가치를 결정하는 그 요인들은 물리적 현상일 뿐, 마치 자연석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 토지 가치는 토지의 용도(농업·건축·공장용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용도는 주어진 게 아니라 기업가적 선견지명을 통해 비로소 발견·창조한 결과다. 그런 발견이 없으면 토지는 한낱 물리적 현상일 뿐이다. 자연석이 값진 물건이라는 사실의 발견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따라서 지대는 불로소득이 아니라 기업가적 발견의 정당한 대가다. 보석을 팔아서 얻은 소득이 결코 불로소득이 아니듯이 말이다. 김연아 선수의 타고난 재주도 운이다. '은반의 여왕'이 된 것은 타고난 재주의 용도에 대한 기업가적 발견의 덕택이다.

조지의 토지사상은 19세기 말 영국의 페비언 사회주의 운동과 미국의 '진보주의' 운동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지의 장례식 참석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다는 것,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이 200만 부가 팔렸다는 것도 그의 토지사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토지 가치를 전부 조세로 흡수한다면 용도의 발견과 정과 용도에 따른 토지 배분을 위한 가격 체계가 없어진다. 수석(水石) 경매시장이나 은반의 경기시장이 존립할 수 없듯이 말이다. 그러면 정부가 토지시장을 대신해야 한다. 이는 토지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그의 토지사상의 치명적 결함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기업가적 발견을 도외시켰다는 점이다.

토지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의 철폐

조지는 토지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사회주의자였고 그 이외에는 철저한 자유주의자였다. 자유무역과 경제자유를 강조했다. 토지세 이외에는 모든 조세의 철폐를 주장했다. 임금에 대한 조세는 노동 의욕을, 자본과 이윤에 대한 조세는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고 주장했다. 토지를 골고루 나누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주는 장점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토지의 재분배도 강력히 반대했다.

조지는 정부규제도 반대했다. 관료가 모든 사람의 경제적 위치를 정하면 통제 경제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규제는 관료 권력의 비대화와 온갖 뇌물과 거짓을 부른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주의도 반대했다. 비효율성 때문만이 아니라 자유의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조지의 자유주의 사상은 큰 반향이 없었다.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했던 것은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매혹적인 표현, 지주에 대한 실감나는 비판, 징벌적 토지세였다. 가난을 없애고 혼잡한 도시생활의 비참함, 실업과 좌절감을

분쇄하겠다는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한국의 토지공개념 입법에 결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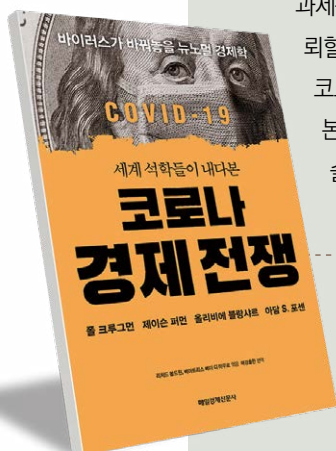
조지의 토지사상은 19세기 말 영국의 페비언 사회주의 운동과 미국의 '진보주의' 운동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지의 장례식 참석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다는 것,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이 200만 부가 팔렸다는 것도 그의 토지사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일본에서는 1890년대 극심한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의 책이 번역되었고 이는 토지세제 정비운동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조지의 사상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 1980년대 후반 개발이익 환수법 등 토지 공개념 3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00년대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일부 정책 참모들이 주장한 토지공개념은 조지의 사상의 영향이 아닐 수 없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조지의 토지세에 대해 논평한 것도 흥미롭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순수 토지세야말로 가장 덜 나쁜 조세라고 했다. 뷰캐넌(James Buchanan)은 토지를 생산적 이용에서 사적인 비생산적 이용으로 전환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초과세할 것을 요구했다. 하이에크(Friedrich Hayek)는 입지 가치와 인위적 개선을 통한 토지 가치의 증가를 구별할 수 있다면 토지세 도입 주장은 매우 큰 호소력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코로나 경제 전쟁

01

지은이

리처드 볼드윈,
베아트리스 베더 디 마우로,
매경출판(편역)

- 저자 리처드 볼드윈은 영국 런던에 있는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소장을 역임했으며 저자 베아트리스 베더 디 마우로는 CEPR의 대표다. 각각 국제경제대학원과 제네바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출판사 매일경제신문사

발간일 2020년 4월 10일

66

역사상 처음... 모든 나라가 멈췄다

이 책은 코로나19가 인간을 넘어 경제를 감염시키고 있는 사태에 주목했다. 전 세계 경제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주식을 시작으로 채권까지 폭락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의 삶도 위태로워졌다. 이러한 위기를 개인과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경제학의 세계적 대가들인 폴 크루그먼, 제이슨 포먼, 올리비에 블랑샤르, 아담 S. 포센 등 26명의 경제학자들은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저마다의 분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1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한다. 그중 제이슨 포먼은 사람을 보호하고 경제 반등을 위한 대규모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며 보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고,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경제 회복을 촉진해야 하며, 기업을 지원하여 파산을 막고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2부에서는 팬데믹 경제학을 주제로 세계 경제에 코로나19가 끼친 영향을 분석한다. 스티븐 G. 세체티, 커밋 L. 스코엔홀츠는 코로나19 시대에 정부가 신뢰를 구축하는 과제는 банкр론을 막는 과제와 닮아있으며 금융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코로나19가 바뀌놓을 뉴노멀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를 예측해 본다. 이 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한 집단지성의 종합 솔루션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판 서문

한국어판 특별 인터뷰(리처드 볼드윈)

1부 코로나19 전쟁

2부 팬데믹 경제학

3부 코로나19가 바뀌놓을 뉴노멀

코로나 이후의 세계

02

-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의 미래예측

지은이

제이슨 생커

옮긴이 박성현

출판사 미디어숲

발간일 2020년 5월 30일

- 저자 제이슨 생커는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의 회장이다. 43가지의 평가기준을 통해 블룸버그 최고 예측가에 선정되기도 했다. 방송 출연과 기조 연설을 통해 미 정부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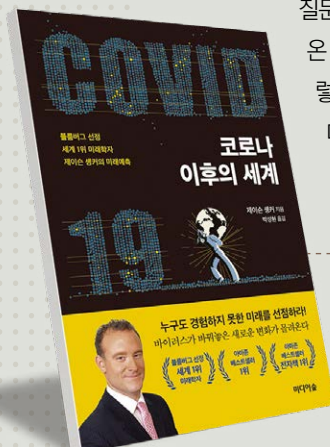
KPFIS's
library

66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저자 제이슨 생커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그 이전과 절대 같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아 경제·사회·기업계에 장기적인 변화가 밀어닥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책은 그러한 변화와 과제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새로운 기회는 무엇일지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러한 통찰력은 그가 오랜 기간 미래학자로서 연구해 온 데이터가 밑바탕이 되었다. 이를 통해 각 분야에 따라 대전환의 핵심을 짚어 누구나 낯설고 혼란스러운 미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1장에서는 코로나 이후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비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2장부터는 일자리, 교육, 에너지, 금융,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부동산, 농업, 공급망, 미디어... 등 각 분야의 미래를 예측하고 총 19장에 걸쳐 변화하는 미래를 소개한다. 코로나 이후 일자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이후 교육의 미래는? 국제관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리더십은 어떠한가? 하는 등 수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불러온 이 위기 또한 지나가겠지만 그 영향은 향후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터와 삶, 여러 산업에 코로나19가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혼란을 헤쳐 나가 계획을 세우는 데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 프롤로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는 자세
- 1장 ~ 19장** 각 분야의 미래
- 에필로그**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Financial Calendar

6月

June



경제

한국은행 1/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January

01

- 재정**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경제** 통계청 2019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 국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February

02

- 재정** 2019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2019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경제** 통계청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 발표

March

03

- 재정**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 경제** 한국은행 2019년 4/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July

07

- 국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August

08

- 경제** 통계청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통계청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September

09

- 재정** 2021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2021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 경제** 한국은행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2020

□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통계청, 5.7.)

- 전국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5만 7천원,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278만 4천원이며, 1인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142만 6천원, 4인가구는 371만 8천원으로 나타남

□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통계청, 5.21.)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5만 8천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3.7% 증가, 가계지출은 394만 5천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4.9% 감소하였으며, 처분가능소득은 429만 1천원(전년동분기 대비 5.1% 증가), 흑자액은 141만 3천원(전년동분기 대비 38.4% 증가)으로 나타남

□ 2020년 1/4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기획재정부, 5.21.)

- 2020년 1/4분기 기준 대외채무는 4,858억불로 전분기 대비 188억불 증가, 대외채권은 9,500억불로 전분기 대비 25억불 증가하였으나, 순대외채권은 4,642억불로 전분기 대비 164억불 감소

□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정부, 5.25.)

-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개최된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위기 상황에서의 재정의 역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중점투자방향」에 대해 논의

□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기획재정부, 5.31.)

-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
- 주요 특징으로는 총세입 402.0조원, 총세출 397.3조원으로 2.1조원 규모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2.6조원이 이월되고 7.9조원 불용됨

April

04

- 재정** 2019년 결산검사 의뢰 (기획재정부→감사원)
-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May

05

- 재정** 2021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2019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19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2019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경제** 통계청 2019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 발표
- 통계청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June

06

- 경제** 한국은행 1/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October

10

- 재정** 국유재산/물품 결산지침 확정
-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November

11

- 재정** 2021년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 경제** 통계청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December

12

- 재정** 2021년 예산 확정
- 경제**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2020년 상반기 온라인대체처리 모의훈련

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는 5월 21일(목)에 장애발생 상황을 대비한 「2020년 상반기 온라인대체처리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dBrain운영본부는 장애발생 시에도 국고금 이체가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장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한국재정정보원, 금융결제원, 시중은행 담당자 등 13명이 훈련에 참여하였으며,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교대근무, 차세대 국고시스템 구축 등을 사유로 미참여하였다.



한국재정정보원, 남대문시장서 '착한 선결제' 동참

한국재정정보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보완에 참여하고자 6일 회사 인근 남대문 시장의 한 음식점을 찾아 '착한 선결제'를 시행했다. '착한 선결제'는 지역 음식점·카페 등에 먼저 일정 금액을 결제하고,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진정되면 재방문해 결제금액만큼 팔아주는 소비자운동이다. 정보원은 이날 갈치조림으로 유명한 남대문시장 갈치골목을 찾아 업무추진비의 일부를 선결제했으며, 이후 인근에서 코로나 극복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도 벌였다. 김재훈 원장은 "외국인들에게도 명성이 자자했던 갈치골목마저 손님이 뚝 끊겨 울상이란 소식에 안타까웠다"며,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직원들과 함께 옛날보다 더 자주 찾아오겠다"고 응원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달에도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 2분기 부서운영비의 50%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선계약·선구매·선결제 등의 방식으로 올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2020년 주요 대상사업 집행 및 실집행 실적 관련 회의 실시

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는 5월 22일(금)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와 2020년 주요 대상사업 집행 및 실집행 실적 관련 회의를 진행하였다. 재정집행관리과와 회의는 dBrain 사용여부에 따라 dBrain 사용기관, 미사용기관(연계기관)으로 구분하여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집계절차, 이슈사항 정리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주요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국재정정보원, 사랑의 생명 나눔을 위한 '헌혈의 날' 행사

한국재정정보원은 5월 27일(수),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난 극복에 동참하고자 회사 인근에 헌혈 버스를 배치하고 단체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헌혈자가 감소하면서 혈액보유량이 주의 단계까지 진입하는 등 혈액 수급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이날, 입주하고 있는 건물(메트로타워)의 다른 입주사인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및 천호케어와 협력하여 100여 명이 헌혈 참여 및 헌혈증 기부 행사를 실시하였다.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은 “시기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헌혈에 팔 걷고 나서준 우리 원 직원들과, 함께 동참해주신 입주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상황을 모두의 따뜻한 마음과 참여로 극복해 가자”고 말했다.



제2회

「열린재정」을 활용한 논문 공모전

재정정보 공개포털 「열린재정」은 국가 재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160여종의 재정통계와 사용자별 맞춤정보를 제공합니다.



공모 분야

「열린재정」의 재정통계를 활용한 경제학·행정학·통계학 등
재정관련 전 분야

응모 자격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대학원생의 경우 수료자 가능)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 응모자 포함 4인까지 가능

시상 내역

시상 등급	편 수	부 상
최우수상	1편	500만원
우수상	1편	300만원
장려상	3편	100만원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내역을 변경될 수 있음

응모 방법 및 일정

참가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0년 6월 1일(월) ~ 6월 30일(화)
- 접수방법: ①참가신청서, ②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전자 우편으로 접수
※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kpfis.or.kr) 참조
- 접수처: thesis@kpfis.or.kr
- 문의: 02-6908-8581

「열린재정」 자료 활용 설명회

- 일시: 2020년 7월 초(추후 안내)
- 대상: 논문 공모전 참가자
- 내용: 「열린재정」 재정정보·통계 자료 소개 및 활용방법 설명,
논문 공모전 일정 안내 및 질의응답

논문 제출마감: 2020년 10월 30일(금)

결과 발표: 2020년 11월 말

상세 내용은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kpfis.or.kr) 또는
열린재정 홈페이지(www.openfiscaldata.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독자 QUIZ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과 함께 평소 재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재정 Talk Talk”에 질문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곳

【이메일】 narajaejung@kpfis.or.kr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2020. 6. 22. ~ 2020. 7. 12.

문 제

중앙정부가 국가 살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으로 인한
수입을 부르는
재정용어는 무엇일까요?

POSTCARD



5월호
애독자퀴즈
당첨자 발표

☆ 퀴즈 정답
특별회계

☆ 상품 당첨자

poh*****@naver.com
ysw*****@naver.com
woo*****@yahoo.co.kr
thu*****@naver.com
gnp***@gmail.com
jby**@hanmail.net

※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트콘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호에 소개된 e-나라도움 사이트를 보고 저도 한번
접속해 보게 되었습니다.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국가재정
그리고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나라재정에 관한
여러 데이터와 콘텐츠들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양방향 소통의
플랫폼으로써 e-나라도움이 많은 국민들의 즐겨 찾기 사이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jby**

※ 〈월간 나라재정〉의 개인구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narajaejung@kpfis.or.kr로 메일 주세요.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의 밝은 내일을 위해
재정정보화를 이끌어갑니다.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